
201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2012. 11. 2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총리실

목 차

I. 평가 개요	1
II. 부문별 평가 결과	5
1. 핵심과제	7
2. 일자리과제	35
3. 녹색성장과제	51
4. 정책관리역량	69
5. 규제개혁	85
6. 정책홍보	97
7. 국민(정책·민원) 만족도	111
III. 향후 추진계획	121

I. 평가 개요

□ 평가 목적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관리역량을 평가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국정성과 창출을 유도

* (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에 의거하여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

□ 평가 대상기관 : 40개 중앙행정기관

- 장관급 기관(21) : 부(15) 및 장관급 기관*(6)
 - * 방송통신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신규) · 원자력안전위원회(신규)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차관급 기관(19) : 외청(17) 및 차관급 기관*(2)
 - * 법제처 · 국가보훈처

□ 평가 부문 : 7개

- ① **핵심과제** : 중앙행정기관별 대표적 정책과제의 추진노력과 성과를 평가(40개 기관)
- ② **일자리과제** : 일자리 대책의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11개 기관)
- ③ **녹색성장과제** :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주요 녹색성장 시책의 성과를 평가(24개 기관)
- ④ **정책관리역량**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에 따르는 필수적인 정책활동의 관리노력 및 성과를 평가(40개 기관)
- ⑤ **규제개혁** : 국민부담 완화와 편의제고를 위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28개 기관)
- ⑥ **정책홍보** : 범정부적 핵심과제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 및 기관간 협력홍보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41개 기관)
- ⑦ **국민(정책 및 민원)만족도** : 고객 위주의 정책추진을 위해 주요 정책 및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평가(41개 기관)

□ 평가 방법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평가부문별로 민간전문가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 * (민간전문가 평가단) 핵심과제 196명, 일자리과제 14명, 녹색성장과제 23명, 정책관리역량 38명, 규제개혁 14명, 정책홍보 18명
- 정책형성·집행·성과 등 정책과정 전반을 점검·평가하되, 정책성과에 중점
 - 핵심과제·일자리과제·규제개혁·정책홍보 부문 평가의 경우 수요자 지향적 평가를 위해 국민만족도 조사결과를 평가에 반영
- 부처 업무설명회를 통해 피평가기관의 업무추진 노력 및 성과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 평가방식은 평가단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 실시*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
 - * 각 부처가 제출한 실적자료(10월말 기준)를 토대로 실시

□ 평가 결과 제시

- 평가결과는 평가 부문별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별 등급화
 -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으로 구분하여 평가
- (상대평가) 전 기관 공통사항으로 기관 간 우열이 필요한 6개 부문은 상대평가
 - * ①핵심과제 ②녹색성장과제 ③정책관리역량 ④규제개혁 ⑤정책홍보 ⑥국민 만족도
 - * 상대평가 등급(4) :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 (절대평가) 일부 기관에 한정되어 추진되는 과제로 각 기관이 추진한 성과의 수준을 평가하는 일자리과제 부문은 절대평가*
 - * 절대평가 등급(5) :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Ⅱ. 부문별 평가결과

1. 핵심과제

1 평가개요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대표적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고 국정성과 창출 유도

□ 평가대상

- 대상기관 : 40개 중앙행정기관

분야	소관부처	
	장관급(21)	차관급(19)
경제	I 기재부, 국과위, 공정위, 금융위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II 농식품부, 지경부, 국토부, 방통위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특허청
사회문화	교과부, 문화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문화재청, 식약청, 기상청
일반행정	법무부, 행안부, 원안위, 권익위	법제처, 경찰청, 방재청, 행복청
외교통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보훈처, 병무청, 방사청, 해경청

- 대상과제 : 총 98개 과제(장관급 기관 각 3개, 차관급 기관 각 2개)

□ 평가방법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핵심과제 평가단』을 구성
 - 평가의 객관성·전문성·공정성 확보 및 국민 시각에서의 평가를 위해 핵심과제별로 해당분야 민간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
 - 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제 I·II, 사회문화, 일반행정, 외교·통일·안보 5개 분야별로 평가 분과를 구성·운영

- 평가 분과별로 각 부처의 실적자료(10월말 기준)를 토대로 평가 지표에 따라 정량·정성평가 병행 실시
 - 부처 내 평가대상과제들의 범위 및 비중 등 가중치를 고려
 - 분과별로 '부처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평가기관의 소명 기회 제공

□ 평가지표

- 정책형성(20) : 정책목표의 적절성(6), 정책수단의 적절성(6), 분석·의견 수렴 적절성(8)
- 정책집행(30) : 추진일정 충실성(9), 상황변화 대응성(1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6)
- 정책성과(50) : 정책목표 달성도(25), 정책 효과성(15), 정책 만족도(10)

2 기관별 평가등급

* 직제순, 굵은 글씨는 포상 대상기관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최우수 (2)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우수 (9)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소방방재청, 관세청, 조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보통 (24)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흡 (5)	국방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기상청

1 총 평

- (여건)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및 세계경제 침체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한반도 주변 정세의 유동성 증대
 -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불안 및 주택시장 침체, 경기둔화 등에 따라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대한 요구 증대
- (성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중소기업 지원 및 서민·취약계층 보호,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점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 달성
 - 물가·고용의 안정세 유지,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및 FTA 성과 가시화, 재정건전성 등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상향
 -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추진 및 연대보증제도 개선 등 서민·중소기업 지원 강화, 보육·교육·의료비 부담 경감,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 구축 등 사회안전망 확충 및 지속가능성 제고
 - 4대강 사업 완공, 여수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및 신산업 창출기반 확충 등을 통한 미래 경쟁력 제고
 - 런던 올림픽에서의 선전, 한류 확산 등 국가이미지 제고 및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 개막,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문화 확산
 -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UN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재진출 등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주도적 참여
- (보완필요) 각 분야의 의미 있는 진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고용·교육·안전관리·안보 분야에서 일부 아쉬운 측면 존재
 -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성장률 하락, 가계부채의 질적 취약성과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이 향후 경제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청·장년층 고용대책과 대학구조개혁 관련 낮은 체감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유해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미흡, 원전·방사선 안전관리 및 성범죄 대응체계의 실효성 강화 필요
 - 전방 접적지역의 경계시스템, 보고체계 등에 문제점 노정

② 분야별 평가결과

① 경제분야

정책 추진여건 및 중점 추진사항

■ 정책추진여건

- ▷ 유럽 재정위기, 세계경제 침체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지속
- ▷ 지난해보다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고,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대내여건 불안

■ 중점추진사항

- ▷ 재정건전성 증대, 경제체질 강화를 통한 안정적 성장, 대외통상 강화
- ▷ 가계부채 문제 등에 선제대응, 서민금융 확대, 금융시스템 선진화
- ▷ 성장동력 확충 및 중견기업 육성, 에너지·자원의 수급구조 혁신
- ▷ 효율적 국토해양 관리, 주거안정 및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 ▷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수급관리,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개방 대응
- ▷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주요 정책성과

- 글로벌 경제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여 국가신용등급 상향 등 성과 도출(기재부, 지경부, 금융위)
 - 국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적극적 외환관리 등을 통해 경기둔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외부충격에 대비
 - * 총 외환보유액(억 달러): ('11.12) 3,064 → ('12.9) 3,220
 - * 국내은행 외화유동성(억 달러) : ('11.6) 43 → ('12.8) 324
 - 물가 안정, 취업자수 2,500만 유지 등 물가·고용지표들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증가
 - * 소비자 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비) : ('11.6) 4.2 → ('12.1) 3.4 → ('12.5) 2.5 → ('12.9) 2.0
 - * 취업자수(천명) : ('12.1) 23,732 → ('12.3) 24,265 → ('12.6) 25,117 → ('12.9) 25,003
 - * 1~9월 외국인 직접투자(억 달러, 신고액) : ('10) 72 → ('11) 75 → ('12) 112
 - 주요국의 신용등급 하락 추세 속에서도 국가 재정 건전성 등에 힘입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모두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
 - * (무디스, 8.28) A1 → Aa3, (피치, 9.6) A+ → AA-, (S&P, 9.14) A → A+

□ **FTA 성과 가시화 및 글로벌 녹색성장분야에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기재부, 지경부, 관세청, 산림청)

- 세계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FTA 혜택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여 경제의 버팀목 역할 수행**

* 한·미 FTA 발효 이후 對세계 총 교역량이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음에도 한·미 FTA 혜택품목(자동차·석유제품 등) 수출은 13.9% 증가(비혜택품목 수출은 1.5% 감소)

-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십이 강화되는 계기 마련**

* GCF 사무국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간 3,800억원으로 예상(KDIS)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업활동 지원 및 서민경제 안정화 노력 지속**(농식품부, 금융위, 중기청)

- 창업과 경영에 큰 부담이던 **연대보증제도('12.5) 및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면책제도('12.4)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

* 개인사업자 대출 중 연대보증 여신 비중 : ('12.4) 8.6% → ('12.5) 0.2%

- 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마련('12.4)하고, 불법대부업체 **집중단속 및 피해자에 대한 금융·법률지원 실시**

* 검·경의 집중단속으로 불법대부업자 7,343명 검거(구속 216명)

*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기본 법률상담(521명) 및 부당이득반환소송(29명, 35건) 지원

*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2,306건 중 661건(29%)에 대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

- 농·축산물 유통단계 간소화를 위한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12.8), 「**축산물 유통구조 합리화 방안**」('12.1) 등을 추진하여 생산-유통-소비자간 **상생 유통환경 조성 및 농·축산물 가격 안정 도모**

* 정가매매 확대, 거래대금 정산소 설치 등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변동 완화 예상

* 유통과정을 단순화(7단계→3단계)하여 유통비용 절감(한우 22.7%, 돼지 18.2%) 기대

□ 신산업 창출 기반 확충 및 자원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통한 미래경쟁력 강화(지경부, 국과위)

- 신성장동력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R&D 지원으로 스마트폰, OLED 분야 등에서 세계최고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녹색제품·기술 수출이 증가하는 등 신산업 육성 성과 일부 가시화

- *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세계 1위(3분기, 39.5%)를 기록중이고, OLED는 94%(3분기) 점유

- * 녹색제품·기술의 수출이 '05년 세계 15위에서 '10년 7위로 상승하였으며, '15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설 전망

- * 신성장동력 R&D 지원(조원) : ('09) 1.8 → ('10) 1.9 → ('11) 2.2 → ('12) 2.8

- 석유·가스 및 전략광물에 대한 자주개발률을 제고하여 중장기 자원가격 상승과 변동성 심화 등 수급구조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기대응능력 강화

- *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 ('09) 5.7 → ('10) 10.8 → ('11) 13.7 → ('12) 20 (전망치)

- * 6대 전략광물(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자주개발률(%) : ('09) 25.1 → ('10) 27 → ('11) 29 → ('12) 31.3

□ 4대강 사업,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등 대규모 국책사업 및 국제행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국토부)

- 4대강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연내 완공 예정)으로 수자원 확보, 홍수피해 예방 및 국민 삶의 질 제고와 더불어 물 관련 기술의 해외수출 발판 마련

- * 불라벤 등 3개의 대형 태풍에도 4대강 본류에 홍수 피해 미발생

- * 생태공원(130km²), 자전거길(1,757km), 캠핑장 등 수변시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4대강 방문객 1,000만명 돌파('12.9)

- * 4대강 기술협력 MOU 체결 : 모로코, 파라과이, 태국

- 여수엑스포(5.12~8.12)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고 해양선진국 도약 및 남해안권 발전 토대를 구축

- * UN, OECD 등 10개 국제기구 및 104개 국가 참여, 국내외 관광객 820만 관람

개선·보안 필요사항

□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성장률 하락 및 경기 불안정에 대한 대응 필요(부처공통)

○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회복이 지연되어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고,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경기전망지표 하향 추세

* GDP 성장률 전망치(조정) : (기재부) 3.7% → 3.3%, (한은) 3.5% → 3.0% → 2.4%

* 실질GDP 성장률(% , 전년동기대비) : ('12.1Q) 2.8 → (2Q) 2.3 → (3Q) 1.6

* 소비자 심리지수 : ('12.5) 105 → (6월) 101 → (8월) 99 → (10월) 98

* 기업경기실사지수(제조업 BSI) : ('12.5) 83 → (6월) 82 → (8월) 72 → (10월) 69

⇒ 글로벌 위기상황의 상시화·장기화에 대비하여 경제활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 등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 가계부채의 질적 취약성 및 부동산시장 위축에 따른 국민경제 불안(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89%, '11년)이 OECD 평균(75.9%, '10년)을 상회하고 있으며, 다중채무자 및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 등 질적 취약성이 심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불안요인으로 작용

* 다중채무자(만명) : ('10) 700 → ('11) 722 → ('12.5) 718

* 자영업자 대출잔액(조원) : ('10) 145 → ('11) 158 → ('12.7) 168

⇒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노력 지속 필요

○ 주택가격 하락 및 매매거래 감소와 전세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하우스푸어 및 서민 주거안정 문제가 대두

* '12.1~10월 주택매매거래량은 554,88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0.4% 감소

⇒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

□ 동반성장 및 공정경쟁 문화의 지속적 확산 필요(방통위, 공정위, 중기청)

- 대기업집단 계열사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2·3차 협력업체의 동반성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

* 내부거래 금액(조원) : ('11.5)144.7 → ('12.5)186.3(28.7% 증가)

* 동반성장 개선노력 만족도(전경련) : (대기업-1차 협력사간) 82.7%, (1-2차협력사간) 39.7%

⇒ 동반성장 문화가 전체 산업계에 확대·파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촉진

- 이동통신 사업자간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대책의 효과가 미흡하고 공정경쟁을 저해

* 이동통신 재판매제(MVNO) 가입자수 : ('12.10) 106만명(총가입자 5,331만명의 1.9% 수준)

⇒ 보조금 과열경쟁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통해 공정 경쟁질서를 확립할 필요

□ 서비스산업·금융시장 선진화 등 제도개선법안의 입법노력 강화 필요(기재부, 금융위)

- 일자리 확대,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이 지연되어 대외 경쟁력 하락 우려

*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OECD국가에 크게 미흡(美의 48.6%, 日의 65.7% 수준)하며, 제조업의 41.4% 수준('09년 기준)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국회통과 노력 필요

⇒ 이해관계자 및 국회 등의 지지확보를 통해 관련 법률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

향후과제

- 글로벌 위기상황의 상시화·장기화에 대비한 체계적·구조적 대응(부처 공통)
 - 유럽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라 건전 재정운영, 외화유동성 관리 등 외부충격에 대한 철저한 대응준비 필요
 - 가계부채의 질 악화 및 주택시장 침체 등 대내 불안요인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통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관리 및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하고, FTA 활용역량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지원
- 기업환경개선, 성장동력 확충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 지속 추진(기재부, 지경부, 국과위, 중기청)
 -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생경제 안정화 도모
 - R&D 투자, 융복합화 지원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강화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상생문화의 정착(지경부, 공정위, 중기청)
 - 동반성장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유통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일감 몰아주기 관행 개선 등 제도적 뒷받침
 - 체감도가 낮은 2·3차 협력업체 등에 동반성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 경주 필요
-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녹색성장 기반 확대(기재부, 지경부)
 - 해외자원 개발, 원유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 능력을 제고하고, 정확한 수급전망에 기반한 에너지 공급설비 확충
 - 배출권거래제 시행,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대비하여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역량 및 대외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그린에너지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한 녹색 산업 육성

② 사회·문화분야

정책 추진여건 및 중점 추진사항

■ 정책추진여건

- ▷ 고령화 등으로 노후생활 및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
- ▷ 경기둔화 지속 및 양극화 심화로 청·장년층의 일자리 요구 증대
- ▷ 주5일제·웰빙·녹색생활 확산으로 질 높은 소비, 문화예술 욕구 증가

■ 중점추진사항

- ▷ 복지예산 확대, 보건복지서비스의 효율성 개선, 보육·양육 지원 확대 식품안전 강화 등을 통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 ▷ 안정적 고용유지, 취약계층 취업 지원 강화 및 열린고용 환경 조성
- ▷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 및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 녹색생활 실천 및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강화

주요 정책성과

□ 사회안전망 확충 및 지속가능성 제고(복지부, 식약청)

-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2012년 복지예산은 전년대비 6.4%가 증가한 92조원을 투입
 - * 복지예산 규모는 정부 총 지출의 28.2%를 차지하는 역대 최고 수준
- 복지대상자와 수급이력 정보를 연계 관리하는 등 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 *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 개통('12.8),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구축('12.9)등을 통해 전국 6.3만 가구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전년대비 30.3% 증가)
-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상비의약품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개선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제고
 - *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급 적용('12.7), 약가인하('12.4), 의원급 만성질환관리('12.4)로 7개 질병 진료비 21%, 약품비 14%, 의원급 고혈압·당뇨 진찰료 10% 경감 예상
 - ** 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12.11월, 13품목), 의약품 재분류('12.8월, 504품목) 실시
- 식중독*, 나트륨 등 위해요소에 대한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 강화
 - *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 등으로 식중독 27% 감소('11.9월, 6,293명→'12.9월 4,604명)

□ **취약계층 고용 지원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및 능력 중심의 열린고용 문화 확산**(교과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용률과 취업자 수는 안정적인 증가 추세

* 고용률 : ('09) 58.6 % → ('10) 58.7% → ('11) 59.1% → ('12.9) 60.0%

- 여성·수급자·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개선 노력(「기간제법」, 「파견법」 개정, '12.2)

* '여성 새일센터'의 경단여성 취업 증가 : ('11) 4.7만명 → ('12) 5.9만명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취업 촉진 : ('11) 63,728명 → ('12) 68,038명

*** 저소득근로자 국민연금('12.8월, 605천명, 544억)·고용보험료 지원('12.8월, 394천명 63억)

-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고,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고졸 취업률**이 개선되는 등 '열린고용'이 사회적으로 확산

*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상향(2.3%→2.5%),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치(12.8월, 26개사 858명 고용) 등

** 고졸 취업률은 전년대비 6.0%p 증가('11년, 23.3%→'12년, 29.3%)하고, 특성화고 진학 준비율은 11.9%p 감소('11년, 32.5%→'12년, 20.6%)

□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교과부, 복지부, 여가부)

-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누리 과정' 5세 아동 전면 실시('12.3) 및 3~4세 아동까지 확대('12.1) 등 아동의 건전한 양육기반 마련

* 센터·지원아동 수 : ('11)131개, 44,651명 → ('12.6)181개, 50,786명

-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현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기 청소년 조기발견·치료·복귀 지원 프로그램 확충

* 학교 내 인성교육 및 Wee 센터 확대, 또래상담 프로그램 및 학업중단 숙려제 전국 실시,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로 통합

- 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학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장학금 지원(1.75조원), 대출제도 개선**등 등록금 부담을 경감

* 37개 국립대학 성과목표제 도입('12.2), '08년 이후 사립대학 통폐합으로 입학정원 4천명 감소, 재정지원(43개)·학자금대출(13개) 제한대학 지정('12.8)

** '튼튼학자금' 대출금리 인하('11년, 4.9%→'12년, 3.9%), 성적요건 완화(B→C) 등

□ '문화·체육·과학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및 취약계층 문화 접근성 확대(문화부, 교과부, 문화재청)

- K-POP 등 한류 확산*, 관광시설 확충, 문화자원 개발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가** 및 관광수지 흑자 전환***

* 유튜브 K-POP 조회수 : ('10) 8억회 → ('11) 23억회, 191%증가

** 외국인 관광객 : ('11.9) 709만명 → ('12.9) 844만명, 19% 증가

*** 외국인 관광수입 : ('11.8) 72.4억 달러 → ('12.8) 95.9억 달러, 32.4% 증가

- 런던 올림픽(하계·장애인)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기록하고, 문화축제 현지 홍보 등으로 스포츠 강국으로서 위상 강화

* 하계 종합 5위, 장애인 종합 12위, 가디언 등 현지 언론에 한국 다수 보도

- '아리랑 3호' 발사 성공(12.5)으로 세계 4번째로 상용위성을 보유하는 등 우주개발, 첨단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살아 숨쉬는 4대 궁·종묘 만들기' 등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문화 바우처'를 통한 취약계층 문화 접근성 확대

* 궁궐 관람객('11.9→'12.9/만명) : 내국인 444 → 506, 외국인 115 → 166

* 바우처 503천매 발급('12.9,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수혜자 160만명

□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및 녹색생활 실천 등 온실가스 감축기반 강화(환경부, 기상청)

- GCF(녹색기후기금) 유치('12.10)를 통해 녹색성장 선도국 위상을 제고하고, 울릉도·독도 감시소 설치('12.2) 등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체계 개선** 등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강화

* ('11) 490개 → ('12) 580개, ** 배출량 산정방식 및 보고서식 개편 등('12.6)

- 그린카드 380만장 보급, 탄소포인트제* 273만 세대, 온실가스 감축사업장 확대('11년, 61개→'12년, 500개) 등 녹색생활 실천기반을 강화

* 가정용 전기·상수도 등 절감시 포인트 제공('12.6월, 3,564백만 포인트 지급)

개선·보완 필요사항

□ 청년·장년층 고용대책의 효과성 제고 필요(고용부)

-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용위축 등으로 인해 청년체감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려움

* 청년고용률(15~29세,%) : ('09)40.5→('10)40.3→('11)40.5→('12상)40.7→('12.3/4)40.8

- 베이비붐 세대 고용연장 및 전직지원사업을 다양화하고 있으나, 활용성과가 부족하고 고용의 질도 낮은 상황

* 내일희망찾기 34.0%(53천명/156천명), 50+새일터적응지원 53.1%(1,062명/2천명)

** 55~64세 취업현황('12.5월) : 생계형 자영업자 37.7%, 임시·일용직 29.2%

⇒ 청년고용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고학력 미스매치 완화 노력을 강화하고, 장년층 고용연장 및 전직 지원서비스 강화

□ 대학구조 개혁 및 성과목표제 실효성 제고 필요(교과부)

- 인구구조 변화, 학령인구 감소로 '18학년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 졸업자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학구조 개혁 필요성 증대

* 대입 초과 정원(전망, 천명) : ('12)△84 → ('18) 4.7 → ('22) 127

-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에 성과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극적인 목표설정 등 운영 성과 미흡

* 취업률을 전년과 동일 또는 낮게 설정, 기개선내용을 계획으로 설정 등

- 국립대학의 경쟁력은 현상 유지 또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

* 세계대학 순위평가('07→'11) : 경북대(493→501~550위권), 전남대(512→551~600위권), 충남대(515→551~600위권)

⇒ 대학별 특성화 노력을 통한 효과적인 구조개혁 실시 및 사전 심사 강화 등 성과목표제 실효성 제고

□ 상수원 녹조 발생 등 하천 관리체계 정비 필요(환경부)

○ 하절기 한강·낙동강 등 주요 상수원 및 하천에서 장기간 녹조현상 발생

○ 지자체 공공하수처리장 부실운영 사례에 대응한 실태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 남양주시 하수처리장에서 '06.6~'12.8월간 연평균 1,275톤의 하수 무단 방류

⇒ 상수원·하천 녹조 대응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실태 모니터링 강화

□ 건강검진 관리 강화를 통한 질병예방 기능 제고 필요(복지부)

○ 지정 검진기관 증가('09년, 6,430개소 → '12.6월, 17,022개소)로 접근성은 증가했으나, 시설·장비 미흡* 및 검진대상자 미 참여**(전체 대상자의 약 30%인 500만명) 문제 상존

* 검진 실시기준 위반, 검진인력 미 배치, 검진장비 부실 등 적발건수 : ('10) 285개소 → ('11) 433개소 → ('12.9) 410개소

** 건강검진 수검률(암 제외) : ('09) 63.3% → ('10) 64.3% → ('11) 69.7%

(검진 미수검 사유 : '시간이 없고 바빠서'(49.0%), 개선요구 사항은 '야간 및 주말 검진 확대'(24.6%))

- 특히,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율은 53.8% 수준('11년 기준)

⇒ 건강 검진기관 지도점검 강화 등을 통한 검진수준 향상, 검진 시간 확대, 검진 필요성 홍보 강화 등 수검률 제고 노력 필요

□ 문화예술기금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 부족(문화부)

○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운용성과 미흡**

* 기금규모 : 2,690억원('12.7 기준)

** 최근 3년간 총 630억원 운용손실 발생

○ 기금운용계획 사전심의 부족 등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감독 기능 미흡 등이 기금운영 손실로 연계

⇒ 자산운용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연기금 투자플(기재부)에 위탁운용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향후과제

-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및 맞춤형 취업 강화**(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 보육·양육에 대한 균형적 지원 강화,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
 - 청장년층의 적성·능력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및 여성·노인·장애인의 취업역량 강화로 사회참여 확대
 - 직업교육과 고졸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열린고용' 문화 확산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청소년 보호 강화**(교과부, 여가부)
 - 학교내 인성교육 확대, 교사·학생·부모간 소통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현장 체감도 제고
 - 위기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탈북·장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청소년 역량개발 강화 및 다문화 가족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 지원

-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식약청, 환경부)
 - 식품, 의약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위해성 관리 강화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노력
 - 환경유해 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독성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 환경안전 강화

- **한류 지원 강화 및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문화부, 문화재청)
 - 한류관련 콘텐츠의 해외수출을 확대하고 관광자원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외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
 -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체계 확립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③ 일반행정분야

정책 추진여건 및 중점 추진사항

■ 정책추진여건

- ▷ 범죄취약계층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우려 심화
- ▷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 확보 요구 증대
- ▷ 공직 생산성·투명성 제고와 지방자치제의 안정적 발전 기대

■ 중점추진사항

- ▷ 법질서 확립을 통해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 ▷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예방·구조시스템 확충
- ▷ 국민권익보호·구제를 강화하고 청렴정책 추진으로 투명사회 구현
- ▷ 공직경쟁력 및 개방성 제고, 지방자치 선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 ▷ 세종특별자치시 이전기관 안정적 정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주요 정책성과

□ 법질서 확립 및 사회적약자 권익보호 강화(법무부, 권익위, 경찰청)

-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주취폭력·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감소

* 주취폭력(검거, 명) : ('11.1~9)879 → ('12.1~9)2,134 / 불법사금융(검거, 명) : ('11.1~9)8,027 → ('12.1~9)11,727

* 살인·강도 등 5대 민생침해범죄 : ('11.1~9) 461,827건 → ('12.1~9) 451,191건

- 아동·지적장애인 대상 지문·사진 사전등록제* 도입('12.6),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12.3)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 '12.6~10월 61만여명 아동·장애인 등록 /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75명 발견·구조

** 법률조력인제도('12.3~10) : 법률조력인 848명 선정, 2,395명의 피해자 지원

- 외국인근로자·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이동신문고 및 법률상담 확대, 저소득층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홈닥터 도입('12.5) 등 소외계층 권익 증진

* 이동신문고 : ('11) 32회 793건 상담 → ('12) 37회 1,213건 / 이동법률상담 : ('11) 17개 지역 853건 → ('12) 54개 지역 935건 / 법률홈닥터 : 무료 법률상담 4,920건

□ 예방대책 강화 등을 통해 재해 피해 저감(방재청, 산림청)

- 자연재해 피해 우려지역(2,587개소) 관리책임자 지정·관리, 위험지역 주민 사전대피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태풍·산불피해 저감
 - * 태풍 피해(사망·실종, 명) : ('02, 루사)246 →('03, 매미)131 →('12, 볼라벤·덴빈·산바)7
 - * 산불 피해(ha) : ('11)1,084→('12)69 ※최근 10년 평균 : 1,135ha
- 급경사지·노후주택 등 재난위험지대 안전관리 강화, 현장안전요원 확대 배치 등으로 해빙기·행락철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감소
 - * 해빙기('12.1~3) 및 지역축제 행사('12.1~10월 852건)시 인명피해 3년 연속('10~'12) 全無 / 여름철 물놀이('12.6~8) 최근 3년 평균(59명) 대비 57.6%('12년 25명) 감소

□ 행정·법제서비스 개선으로 행정효율화 및 국민편익 제고(행안부, 법제처)

- 고졸자 공직 진입경로 확충, 민간경력자 및 장애인·저소득층 공직 채용 확대 등 채용경로 다양화를 통해 공직 개방성 제고
 - * 고졸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 신설(104명), 특성화고 출신 기능인재 채용 확대('11년 53명→'12년 100명), 5급 일괄채용 확대('11년 93명→'12년 103명), 장애인·저소득층 채용 확대(135명→195명)
- 자치단체 기능개편 등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 확정('12.6), 국민생활 직결 분야의 유동정원제 활성화** 등을 통해 행정효율화 도모
 - * 36개 시군구 통합 및 특·광역시 자치구·군 개편 추진 / 청주·청원 통합 결정(6.27)
 - ** 국민생활 안전(6,602명), 복지·문화(350명) 등 주요현안에 10,012명 재배치·활용
- 입법과정에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는 국민법제관을 활성화*하고 신속·편리한 법령해석서비스** 제공으로 국민편익 증진
 - * 국민법제관 : ('11) 28개 분야 804명 → ('12) 33개 분야 1,062명 / 청소년법제관 신설('12.6)
 - ** 법령해석 요청 증가('11년 1,110→'12년 1,465)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 단축('11년 30.0일→'12년 27.3일)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및 조기 정착 도모(행안부, 행복청)

- 광역도로망 조기 개통, 자치사무 이관, 공공기관 준공·이전 등 세종특별자치시 출범(7.1) 기반 확충
 - * (광역도로) 대전 유성 연결('12.3), 오송역 연결('12.9) / (대중교통) BRT 개통('12.9) / (정부청사 준공) 1단계 1구역 총리실('12.4) / 2구역 국토부 등 10개 기관('12.11 예정)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재난·안전사고 대응역량 강화 필요(행안부, 자경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원안위, 방재청)

- 유해물질 누출사고*,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응 미흡으로 국민불안감 유발

*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12.9, 5명 사망) 발생시 유해물질 안전관리체계 다원화(4개 부처 5개 법률)·효율적 초동대처를 위한 정보공유 및 장비부족 등으로 피해 확산

** 부산 지하철 화재사고('12.8, 44명 부상)시 대피통로 협소·피난시설물 설치 미흡 등 지하철 안전사고 우려 증가(최근 1년간 부산지하철 유사화재 3회 발생)

- 원자력발전소 전력공급 중단사건*, 생활주변 시설 방사선 검출** 등으로 원전·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 고리 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고('12.2)시 전력공급 중단사실을 미인지하고 재가동 승인('12.3) / 위조된 품질검증서를 이용한 원전부품 사용으로 영광 5·6호기 가동 중단('12.11)

** 노원구 도로 등에서 방사선 검출

⇒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보완, 비상대응훈련 강화, 원전·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재난대응 역량 내실화

□ 범죄 대응체계 및 치안대책 강화 필요(법무부, 고용부, 경찰청)

- 112신고센터 위급상황 대처 부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이원화*, 검·경간 범죄정보 공유 미흡** 등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우려 심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여가부,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법무부에서 신상정보 관리

** 검-경간 범죄자 정보(전자발찌 착용자 위치정보 및 DNA 신원확인) 실시간 공유 미흡

***성범죄(건) : ('11.1~9) 16,516건 →('12.1~9) 16,843건

- 고용허가제 만기도래 외국인 근로자 자진출국 유도 등 불법체류자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지속 증가 및 강력범죄로 인한 사회문제화

* 불법체류자(명) : ('10)168,515 →('11)167,780→('12.8)175,679 / 불법체류 외국인범죄('12.1~8):1,038명

⇒ 성범죄자 관리체계 개선, 불법체류자 관리·감독 및 치안 유관기관간 협력시스템 확충 등을 통해 범죄 대응체계 강화

□ 지방재정 위기관리 노력 지속 필요(기재부, 행안부)

-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 지방공기업 채무 증가, 중복·전시성 사업 등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위기관리 대책 지속 필요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률 지속 증가('08년 35% → '12년 39%)

** 지방공기업 부채(조원) : ('07)27.7 →('08)32.4 →('09)42.7 →('10)46.5 →('11)49.4

⇒ 지방재정 상황 주기적 점검 및 지방 투자사업 사전심사 강화 등 지방재정 건전성·책임성 확보 대책 지속 추진

향후과제

□ 재난 대응역량 및 국민생활 안전 강화(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방재청)

- 범정부 재난대응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재난대응매뉴얼 정비·비상대비 훈련 내실화 등을 통해 대형·특수재난 사고 대응 강화
-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예방·대응 강화를 통해 국민 치안불안 해소

□ 행정효율성 제고 및 공직기강 확립 노력 강화(행안부, 권익위, 법제처, 행복청)

- 공직개방성 제고와 융합행정 강화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조직·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국제기구 유치 등 국제사회 역할 확대에 따른 공직의 글로벌 역량 강화
- 공공기관 이전 대비, 정보공유·민원처리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효율화 방안 지속 추진
- 부패유발구조·제도 개선 등 공직비리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행정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직사회 신뢰도 제고

□ 지방행정체제 선진화 및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행안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 과정에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선제적 지방재정 위기관리 등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책임성 제고

④ 외교 · 통일 · 안보분야

정책 추진여건 및 중점 추진사항

■ 정책추진여건

- ▷ 남미 신흥시장 부상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교역 파트너 다각화 필요
- ▷ 북한 정권교체에 따른 한반도 안보상황 유동성 증가

■ 중점추진사항

- ▷ 전략적 한반도 안보협력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
- ▷ 통일대비 인프라 구축 및 남북관계 발전기반 조성
- ▷ 북한 도발 대비 군사태세 강화 및 국방개혁 등 선진 군사역량 구축

주요 정책성과

□ 한반도 평화 · 안정을 위한 전략적 안보협력 강화(외교부, 국방부)

- 한 · 미 정상회담*(3.25), 외교장관회담(3.9), 외교 · 국방 장관회의(6.14)의 정례화(격년) 등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안보협약체** 공고화

* 임기중 정상회담 11회, 미 대통령 방한 3회

** 한 · 미 동맹, 북한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을 포함한 범세계적 협력 사항 논의

-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4.13)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도출하고 한 · 미 미사일지침을 개정**(10.7)하여 북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 억지 능력 확보

* UN 안보리 의장성명 도출(4.16), 40여개국 규탄 성명 표명, G8 정상회의 공동성명(5.19)

**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300→800km), 무인기 탑재중량 증가(500kg→2.5ton) 등

- 핵안보정상회의* 개최(53개국, 3.27),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재진출**(10.18)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주도적 참여 기반 마련

* 핵물질 최소화, 원자력시설 보호 등 핵 · 방사능 테러방지 실천합의(11개 분야 정상선언문 채택)

** 1차 UN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진출('96~'97)

□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국격 제고 및 국가 경쟁력 강화(외교부)

- 한 · 미 FTA 발효(3.15), 한 · 터키(8.1) 및 한 · 콜롬비아 FTA 체결(8.31) 등 경제협력 네트워크 확대로 국익 창출

* 한 · 미 FTA 발효이후 △對美 수출은 4.4% 증가 △외국인 직접투자는 28.9% 증가(전년동기대비)

-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의 국제 기구화 및 녹색기후기금(GCF) 유치('12.10)를 통해 녹색성장 분야의 국제적 위상 강화

* GGGI는 한국주도 설립 최초국제기구(16개국)로 개도국 전략수립 등 지원, GCF는 기후변화협약에 의거한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지원 특화기금('20년부터 연1천억달러 조성 예정)

□ 북한의 국지도발 억제 및 해양경비 역량 확충(국방부, 해경청)

- 정부의 강력한 대응의지 천명 및 단호한 군사응징 태세로 북한의 군사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

* 북한의 국지도발 현황 : ('10) 10건 → ('11) 1건 → ('12.9) 0건

- 주변국과의 영유권 갈등해역 대응력 강화를 위해 위기 대응 훈련 및 전력보강을 실시하여 해양 안보* 및 주권 수호 역량 강화

* 독도 : 함정 증강(6→7척) 및 항공순찰 강화(주 2회→1일 1회), 위기대응 훈련 5회

* 이어도 : 함정증강(6→7척), 이어도 수호 훈련 2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현황을 재점검,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종합대책 수립·추진(4월)

* 민관 통합 정착시스템 구축, 하나원 서비스 내실화, 취업을 통한 조기 자립,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 강화, 탈북여성 맞춤형 지원 등(통일부 등 8개 부처)

- 제2하나원 건립(화천 간동)을 통해 북한이탈주민(23천명, '11년말) 증가에 대응하고 남한사회 정착기반 마련

* 공정률 100%(10월말 현재, 12.5 개원예정), 최대 500명 수용, '11('10)년 2,706(2,401)명 입국

□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평한 병역의무 이행 정착(병무청, 방사청)

- K9 자주포, T-50 훈련기, 수리온 헬기 등 주요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을 추진*하여 수출 경쟁력 확보**

* 11개 핵심부품 국산화에 2년간 55억원을 투자하여 579억원 수입대체 효과 창출 예상

** 방위산업 수출 현황(억달러) : ('09) 8.30 → ('10) 6.31 → ('11) 3.71 → ('12.10) 20.40

- 병역감면제도를 악용한 병역면탈 방지 및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 등으로 병역의 공정성·형평성 강화

*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병무직원 사법경찰권 부여(4월), 5년차 재징병검사제 시행(1월) 등

개선·보안 필요사항

□ 전방 접적지역 기강 확립 및 경계시설 보강 대책 필요(국방부)

-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이 GOP 철책을 통과하여 귀순하는 등 전방 접적지역의 경계시스템, 보고체계 등에 문제점 노출

⇒ 경계태세 강화, DMZ 지역 감시체계 보강, 상하급 부대 간 상황보고 체계 명확화 등 대책 수립 필요

□ 분단 이재민의 고통 해소 노력 지속 필요(통일부)

-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의 고령화로 소재지 파악, 가족 상봉, 전사자 유해발굴 등이 시급한 상황이나,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담보 상태

* 이산가족 상봉 제의(8.8), 국제적십자 회의 시 대북접촉 요청(8.31)을 했으나 북한측 무대응

⇒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설득으로 이산가족 교류 및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협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

□ 국내개발 무기 신뢰도 제고 노력 필요(방사청)

- 對잠수함 미사일 등 국내 개발 일부 무기체계에서 운용간 성능결함 발생으로 전력화 지연

* 해군훈련 중 오작동 발사(청상어, '12.6), 미사일 목표물 타격 실패(홍상어, '12.7)

⇒ 개발단계 설계품질 확보, 양산·운용단계 품질 검증 및 참여 업체 책임강화 등 전순기 품질 관리제*를 통한 무기체계 성능향상 노력 필요

* 완제품 검사 위주의 품질보증에서 업체선정, 개발, 시험평가, 양산, 운용별 품질보증 실시

향후과제

□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협력외교 강화(외교부, 통일부, 해경청)

-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의 평화·안정 정착을 위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관계 내실화
-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과거사, 중국과의 불법조업·탈북자 북송 문제 등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처방안 강구
- UN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수임에 대비한 의제 준비 및 한반도 안보상황에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외교적 역량 강화

□ 체계적인 통일 대비 및 분단 이재민 고통 해소 노력 강화(통일부)

- 통일준비 체계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논의의 진전을 위해 대국회 협조 및 대국민 설득 노력 강화
- 이산가족 교류촉진,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등 분단이재민 고통 해소 노력 지속 강구

□ 국방개혁 지속 추진 및 전방 대비 태세 강화(국방부)

- 국방개혁 관련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하위 법령 정비 및 개혁방안 세부작업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사관학교 설치법」

- GOP 경계 과학화 시스템 조기 도입 등 경계체계 강화로 전방 접적지역의 군사대비 태세 확립

□ 장관급 기관 : 21개

부처명	과제명
기재부	①재정운용 효율화 및 재정건전성 증대 ②경제체질 강화를 통한 안정적 성장 도모 ③대외통상 강화를 통한 경제협력 확대
교과부	①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선진교육체제 확립 ②모두를 위한 창의·인성교육 확산 ③융합과 창조의 선진 연구개발체제 구축
외교부	①한반도의 평화·안정 추구 ②국가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외교 강화 ③글로벌 협력외교를 통해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통일부	①내실 있는 통일미래 준비 ②분단이재민의 고통 해소 ③남북관계 발전기반 조성
법무부	①법질서 확립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기반 조성 ②국민 권익 증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따뜻한 법치 ③개방과 통합의 외국인 정책 추진
국방부	①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②선진 군사역량 구축 ③군 복지증진 및 복무여건 개선
행안부	①효율적 정부조직 및 인력 운영 등을 통해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 ②지방자치 선진화와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 ③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문화부	①생활 속 문화·체육환경 조성 및 문화예술 창조역량 강화 ②스마트 환경을 선도하는 콘텐츠 강국 구현 ③매력 있는 관광 한국 실현
농식품부	①농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정적 수급관리 ②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개방 대응 ③농수산식품 성장동력 창출 및 수출 확대
지경부	①성장동력 확충 및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산업강국 실현 ②해외진출 및 개방 확대를 통한 선진통상강국 실현 ③에너지·자원의 수급구조 혁신을 통한 녹색성장 주도
복지부	①사회안전망 강화 및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②보건의료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성장기반 확충 ③노후소득보장 체계 내실화 및 보육서비스 확대
환경부	①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을 통해 기후변화·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 ②맑은 물 환경 조성을 통한 물 복지 구현 ③국민 생활 속 환경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부처명	과 제 명
고용부	①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지원 ②인적자원의 질과 경쟁력 제고 ③상생의 고용환경 구축
여성가족부	①여성의 역할 강화 및 양성평등 체계 구축 ②건강한 청소년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 ③여성·아동의 인권보호 및 지원
국토부	①효율적이고 안전한 국토해양관리 ②주거안정 및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③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통위	①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네트워크 고도화 ②품격 높은 방송 구현 및 미디어 경쟁력 제고 ③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증대 및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
국과위	①R&D 투자효율화 및 성과 극대화 ②미래 성장동력 전략 및 계획 수립
원안위	①최상의 원자력안전관리체계 확립 ②방사선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 체제 구축
공정위	①하도급·유통·가맹사업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②경쟁제한적 행태 시정 및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③소비자역량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위	①시장불안요인 선제대응 ②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및 서민 금융지원 확대 ③금융시스템 선진화
권익위	①권익보호 구제 확대로 억울함이 없는 사회 구현 ②청렴정책 추진 강화로 투명사회 구현

□ 차관급 기관 : 19개

부처명	과 제 명
법제처	①선진법제 구축 및 국민에게 친근한 법령 만들기 ②효율적 법제 지원 및 법령 해석
보훈처	①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문화 확산 ②국민이 공감하는 국가유공자 인정과 보상
국세청	①성실 신고기반 확충을 통해 안정적으로 세입 확보 ②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행위 엄단
관세청	①FTA 총력지원체계 운용으로 FTA 효과 극대화 ②불공정무역 단속 강화로 대외거래질서 확립 및 민생안정 도모
조달청	①경제 활력을 지원하는 조달시스템 구축 ②조달제도 개선을 통한 공공조달서비스 선진화
통계청	①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통계의 효율적 생산 ②통계인프라 강화로 국가통계를 선진화
병무청	①예외 없는 병역이행체계 정착 ②보충역 복무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사청	①방위산업 선진화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②국방 기술 역량 및 품질 안정성 제고
경찰청	①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②법질서 확립 및 사회 안정 강화
방재청	①자연재해·인적재난 예방시스템 강화 ②소방정책 선진화로 인명 피해 저감
문화재청	①문화유산의 효율적·체계적 보호를 위해 보존·관리체계 개선 ②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가치창출과 확산으로 국민의 향유기회 확대
농진청	①농축산물 품질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②농촌활력화 및 농업인 역량 강화
산림청	①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재해 적기 대응 ②산림휴양서비스 증진 및 목재산업 육성
중기청	①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육성 ②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특허청	①지식재산의 창출·보호 기반 강화를 통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 ②신속·정확한 심사를 통한 지식재산 서비스 고도화
식약청	①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을 위한 식품 안전망 확충 ②세계시장 확대에 대비한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강화
기상청	①위험기상 사전 대응 및 기상서비스 강화 ②기후변화 대응 지역기후 서비스 및 기상산업 육성 강화
해경청	①경비체제 및 해양범죄 대응역량 강화 ②해양안전관리 및 오염방제 체계 강화
행복청	①이전기관 안정적 정착 지원 및 기반시설 적기 구축 ②자족기능 강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 일자리과제

1 평가개요

- (평가목적)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정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정책 추진동력 강화를 위해 주요 일자리 과제에 대한 평가 추진
- (평가대상) '12년도 각 부처 일자리 과제 중 예산규모나 정책적 중요성이 큰 11개 부처 32개 과제
 - * 4.6조원 규모, 직접일자리 56.4만개중 45.3만개 대상
- (평가주체) 정부업무평가위원, 민간전문가(14인)가 참여하는 「일자리 과제 평가단」을 구성·평가 (4개 분과로 편성·운영)
 - * ①청년고용개선 분과, ②열린고용 및 현장중심의 인적자원양성 분과, ③사회서비스일자리 및 취약계층 지원 분과, ④노동시장 제도개선 분과
- (평가방법) 각 부처의 실적자료(10월말 기준)를 토대로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정성평가 병행 실시
 - * 정책형성 (25점), 정책집행 (30점), 정책성과 (35점), 만족도 (10점)
 - 분과별로 '부처업무설명회'를 개최하여 쟁점에 대한 토론과 피평가기관의 설명기회 제공

2 기관별 평가등급

* 직제순, 굵은 글씨는 포상 대상기관

평가결과	기관명
최우수 (1)	중소기업청
우수 (1)	교육과학기술부
보통 (9)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림청

1 총 평

□ (성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고용률과 취업자수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 '09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 고용률 (15세이상,%): ('08)59.5→('09)58.6→('10)58.7→('11)59.1→('12상)59→('12.9)60

* 취업자 증감(천명) : ('08)144→('09)△71→('10)323→('11)415→('12상)449→('12.9)685

○ '12년 직접일자리 목표 56.4만개중 56만개를 지원(128월)하고, 이 중 73%(41.2만개)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기여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단계별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지원 인프라, 자금지원 확대 등 청년의 창조적 도전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증가

* 신설법인수(1~9월,개) : ('10)45,136→('11)47,959→('12)56,752

○ 고교 직업교육 강화, 차별요소 제거, 先취업後진학 지원 등 범정부적 노력으로 공공·민간의 열린 고용 문화 확산

* 특성화고 취업률(%) : ('09)16.7→('10)19.2→('11)25.9→('12)37.5

○ 기초생활수급자의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대와 탈 수급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일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

*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명) : ('10)2,480→('11)7,855→('12)8,262

*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취업률(%) : ('10)34.2→('11)43.1→('12)50.3

□ (보완필요)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비,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청·장년층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 직접일자리 사업의 취약계층 참여와 안정적 일자리로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과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 강화 필요

○ 청년 체감 고용 개선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학력 미스매치 완화 등 지속 추진하고, 장년층 고용연장 및 전직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필요

○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고용안정지원사업 활성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안정성 확보노력 지속 필요

② 분야별 평가결과

① 청년고용개선 및 인적자원 양성

주요 정책성과

□ 청년의 창조적 도전을 적극 지원하여 창업붐 조성(중기청)

- ‘청년전용 창업자금’(2,300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성실한 창업실패자의 경우 상환금 일부를 면제해 줌으로써 청년 창업자의 위험을 분담
 - * 청년전용 창업자금 목표치(1,800명)를 상회한 3,534명에게 지원(‘12.9)
-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 등 창업지원인프라를 지방으로 확산함으로써 청년창업 저변 확대
 - * 청년창업사관학교 : (‘11)안산 → (‘12)광주·경산·창원 3개 추가지정, ‘11년 1기 졸업생 212명 전원 창업하여 682명 일자리 및 290억원 매출 발생(‘12.6)
- 19개월 연속 신설법인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신규창업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39세 미만 청년 창업도 증가
 - * 신설법인수(1~9월, 개) : (‘10)45,136→(‘11)47,959→(‘12)56,752
39세 미만수(1~9월, 개) : (‘10)14,112→(‘11)14,057→(‘12)16,017

□ 범정부적 노력으로 열린고용 문화 확산(교과부,고용부,기재부,중기청)

- 고교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강화, 先취업·後진학 지원으로 대학 진학비중이 감소하는 등 고학력 미스매치 완화 토대 마련
 - * 특성화고 취업률(%) : (‘09)16.7→(‘10)19.2→(‘11)25.9→(‘12)37.5
특성화고 진학준비자 비중(%) : (‘11)32.5→(‘12)20.6 (11.9%p↓)
- 공공·민간의 고졸채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학력보다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열린고용 사례 증가
 - * 공공기관 고졸채용 확대(명) : (‘11.9)590→(‘12.9)1,670
30대 그룹(명) : (‘11)37,273→(‘12)41,000 / 금융권(명) : (‘11)672→(‘12)873
 - * (한국수력원자력) 고졸자도 입사 4년 후 대졸과 동등 대우, (기업은행) 고졸행원 부활, (두산중공업) 기술임원 신설, 생산직원의 직함을 사무직과 동일화

□ 더 많은 청년층에게 다양한 고용기회 확대(기재부,고용부,외교부 등)

-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청년 신규채용 여력을 확대하고, 경영평가제도 개선,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독려

* 공공기관채용(명) : ('11)10,000→('12)15,000 / 10,764명 채용('12.9)

- 중소기업 인턴제를 확대하고, 훈련연계형 인턴제 추진으로 사업을 내실화하는 등 안정적 일자리로 연계 강화

* 중소기업인턴(명) : ('11.8)21,882→('12.8)26,139 (19.5% ↑) / 정규직 전환률(%): 83.9 ('11.12)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추진시 '제2의 중동붐'을 활용, 중동 지역 전문인력 진출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청년의 다양한 경험 지원

* 글로벌청년리더사업 중동진출인원(명) : ('11)563→('12)819 /취업 331, 인턴 305, 봉사 183

□ 학교로부터 노동시장 이행 원활화 추진(고용부,교과부)

- 기업체 경험이 있는 '취업지원관'(대학 162·특성화고 478명), '산학협력 중점교수'(794명)를 확대 배치하여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

- 청년취업아카데미 확대*, 산학협력 선도대학 내 '현장실습 지원 센터' 설치(51개) 등으로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확산

* ('11)50개 기업·사업주단체, 118개 대학 → ('12)59개 기업·사업주 단체, 142개 대학

개선·보완 필요사항

□ 청년 체감 고용여건 개선노력 강화 필요(공통)

- 각종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한계와 경기둔화로 청년 고용률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상황

* 청년고용률(15~29세,%) : ('09)40.5→('10)40.3→('11)40.5→('12상)40.7→('12.3/4)40.8

⇒ 청년층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과 고학력 미스매치 등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필요

□ **직업훈련 등 인력양성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고용부,지경부,중기청)

- **실업자 계좌제 훈련은 산업계 인력수요와 훈련생 훈련수요간 불균형과 영세 훈련기관 증가 등으로 취업성과가 다소 부진**

- * 내일배움카드제 전체 138개 직종중 주방장및조리사 등 5개 직종이 60% 이상('12.10)
- * 내일배움카드제 취업률(%) : ('10)33.6→('11)38.2→('12.9)25.8

-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훈련은 중소기업의 훈련에 대한 적극적 유인책 부족, 부처별 유사사업으로 인한 비효율 존재**

-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고용부)외에 이와 유사한 '인력구조고도화 사업'(중기청) 별도 운영

-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은 전체 산업수요 측면에서 관계기관간 상시적 협의체계 및 취업성과 등 객관적 성과관리 체계 미흡**

- *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은 고용부 소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과 지경부 등 각 부처 소관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대별되나, 관계기관간 수평적 연계 협력이 부족하고, 취업 등 성과관리 체계가 취약해 과잉 양성 우려 등 존재

⇒ **부처간 연계강화 및 일원화된 관리체제로 사업 성과 제고 필요**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내실화 필요**(고용부,교과부,외교부)

-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진출 전략이 부족하여 해외 연수사업 취업률이 낮고 단순서비스 직종에 쏠림현상이 지속**

- * 글로벌취업지원사업 취업률(%) : 53.1 (취업자/참여자 = 8천명/15.7천명, '10~'12.9)
- * 직종별 해외연수취업(%,'12.9) : 사무/서비스 85.8, IT 4.0, 의료 1.3, 기계/금속/토목 0.3 등

- **해외인턴·봉사사업은 현지 안전관리와 사업종료 후 취업희망자 취업연계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

- * 해외인턴 : 취업 미 관리/ 해외봉사 : KOICA 해외봉사단원만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실시, 현지 관리인력 부족 (68명 관리요원이 1,600명 봉사단원 관리)

⇒ **국가별·직종별 프로그램 다양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사업관리·참가자 안전체계 강화, 통합 내실화 등을 통해 성과 제고**

②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취약계층 지원

주요 정책성과

□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복지부,고용부)

- **자활사업** 참여자를 확대(61천명→66천명)하고, 희망키움통장 확대 등 근로유인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자활성공률 증대**

- *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누적, 가구) : ('10)10천→('11)15천→('12)18천
- * 자활성공률(%) : ('10.6)10.1→('11.6)12.6→('12.6)16.8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있어 근로유인을 강화함으로써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의 취업능력 향상 및 일을 통한 자립에 기여**

-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탈수급한 경우 일정기간(2년) 교육·의료를 제공하는 '이행급여' 지급대상에 포함
- *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명) : ('10)2,480→('11)7,855→('12)8,262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취업률(%) : ('10)34.2→('11)43.1→('12)50.3

□ 취업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고용부,복지부,여가부 등)

-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확대(90개→100개)로 취업지원 강화**

-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12.6,7)
- * 새일센터 취업자수(명) : ('10.9)6.9만→('11.9)7.9만→('12.9)8.9만

-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11년 9,461명→'12.5월 10,279명) 및 맞춤형훈련과 장애유형별 특성화 훈련강화를 통해 장애인 취업 지원**

- * 맞춤형훈련 취업률 : 94.6%(455/481명)/ 장애유형별 훈련 취업률 : 81.2%(181/223명)
- *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 : ('10)2.19→('12)2.22

- **(노인) 공공분야 노인 일자리 확대(200천개→220천개), 시니어 인턴십 등 시장자립형 일자리 확대로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 * 시니어인턴십 참여 : ('11)3,000명, 54억원→('12)3,550명, 64억원

□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문화부,행안부,복지부)

-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을 관계기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여 군부대·교정시설·소년원 등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대응하여 문화예술분야 일자리를 확대
 - * 학교 예술강사 지원(4,263명), 토요일문화학교 강사(753명) 등 총 5,741명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시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4,779가구), 농어촌 일손돕기(1,286가구) 등을 통해 소외계층의 생활불편 해소
-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이용자 선택권 확대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12.25 시행)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직접일자리사업의 취약계층 참여 확대 및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 강화 필요(고용부,행안부,복지부,산림청 등)

- 직접 일자리사업의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은 73.5%('12.7월)에 달하나, 일부 사업은 목표에 미달하고 관리가 미흡
 - * 문화예술교육활성화 (2.8%/10%), 해외봉사단 (6.1%/15%), 산림서비스 도우미 (47.5%/50%), 숲가꾸기 (18.3%/20%) 등
 - 특정 참여자가 한시적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하는 문제가 있으며, 취업알선·직업훈련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 지원 노력 부족
 - * 중앙부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인원 중 2년 이상 반복참여자는 37.8% (518천명/1,371천명, '09.1~'12.5)
 - * (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적극적 취업연계 실적은 5.7% 수준
- ⇒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12.9.7)에 따라 일자리사업을 취업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하고, 직업훈련기회 제공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 이동을 유도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과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복지부,고용부,행안부 등)

-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나, 돌봄 종사자의 낮은 임금과 자격 미비·교육 부족 문제 지속

- * '12년 돌봄서비스 단가인상률 목표치 : 3%, 최저임금인상률 : 6.1%
- *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 중 자격증 소지자는 44%, 의무교육시간 미이수사례 빈발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원이 대부분 인건비 등 직접지원에 치중되고, 성장단계나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은 부족

- * 사회적기업 육성예산 1,760억원 중 70%인 1,237억원이 인건비 지원
- * 마을기업 예산 262억원 중 인건비·재료비·시설비 등 직접지원비중이 70%수준

⇒ 투입인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훈련, 자격제도 운영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와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지원, 신규수요 발굴 등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 장년층 고용연장 및 전직지원서비스 활용도 제고 필요(고용부 등)

- 임금피크제 등 고용연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평균 정년은 57세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은 53세 수준

- * 기업평균정년(세) : ('08)57.1→('09)57.2→('10)57.3→('11)57.4→('12)57.4

- 50세 이상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주된 일자리에서의 빠른 은퇴로 생계형 자영업자나 임시·일용직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고용의 질은 낮음

- * 55~64세 종사자 지위별 취업현황('12.9) : 생계형 자영업자 37.7%, 임시·일용직 28.8%

- 베이비붐 세대 퇴직 후 취업지원 사업이 계속 다양화되고 있으나, 통합적 정보 제공 미흡, 인지도 부족 등으로 활용성과 미흡

- * 청장년층 대상 '내일희망찾기 사업' 참여율(%) : 34.0(53천명/156천명)

- * 50+새일터 적응지원사업 참여율(%) : 53.1(1,062명/2,000명)

-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취업률(%): ('11)35.1 → ('12.9)23.2

⇒ 장년층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연장과 영세 자영업으로의 진입억제, 창업교육 등을 통해 고용의 질을 제고하고, 재취업 통합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전직 지원사업의 활용도 제고

③ 노동시장 제도개선

주요 정책성과

□ 자치단체 주도의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고용부)

-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사업에 244개 자치단체 모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일자리 문제가 지방행정의 우선과제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

* 일자리 공시제 참여수 : ('10)209개→('11)227개→('12)244개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중앙 주도 정책으로 착안하기 힘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

* ('11)131개 자치단체 174개 사업→('12)136개 자치단체 276개 사업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취업실적(명) : ('09)3,641→('10)3,878→('11)5,768

개선·보완 필요사항

□ 노동시장 유연성·안정성 제고 노력 강화 필요(고용부)

-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업 지원 실적이 부진하고, 대기업의 활용도는 낮은 상황

* 지원금 지급실적 24% (602명/2,463명, '10~'12.8)

* 50인 미만 기업에 승인기업 집중(65%,595개), 300인 이상 기업은 11.8%(108개)

- 고용안정지원사업 중 고용촉진·고용창출사업 및 자영업자 전직 지원사업이 엄격한 요건, 홍보부족 등으로 지원실적*이 부진

* 고용촉진지원금 25.4%(121억/479억), 고용창출지원금 32.9%(166억/505억)

⇒ 시간제 일자리 적합 직무 발굴과 인식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등 활성화 방안 추진

③ 향후과제

□ 청년 고용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 강화(기재부, 고용부 등 공동)

- 민·관 공동으로 청년 대상 양질의 일자리 확충 노력 강화 및 해외취업, 창업 등 새로운 일자리 개발 지원
- 창업의 양적 증가 뿐만 아니라 창업유지율에도 정책 목표를 두고, 사후관리를 통해 성공가능성이 있는 창업 지원 강화
- 열린 고용 정책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고교 직업 교육 내실화, 능력중심 고용문화 정착 노력 지속 추진
- 뿌리산업, 신성장동력산업 인재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 인력 양성 확대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미래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

□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고용부, 복지부 등)

- 경기 불안에 민감한 청·장년층, 여성,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 등 사회안전망 강화
- 장년 및 노인은 재직근로자 고용유지와 정년연장을 지원하고, 퇴직전부터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재직중 전직지원서비스 강화
- 자영업자의 준비된 창업 유도를 위한 현장교육 강화, 전직지원 서비스 강화로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추진
- 비정규직, 저학력자,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를 확대하고, 직업훈련이 근로조건, 고용형태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내실화

□ 일자리 지키기, 나누기 및 유연화 지원(고용부)

- 경제 불확실성으로 경영여건 악화시에도 구조조정 최소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사업 확대 및 내실화
- 경영악화 기업의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직접 지원제도 도입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 임금피크제 등 기업의 자율적 고용연장 확산과 장시간 근로개선 등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는 고용구조 정착
- 고학력 여성, 일·학업병행 희망 청년, 장년층 등 대상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편과 컨설팅 및 인식개선 추진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및 사업간 연계 강화(공통)

- 경기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하고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효율화 지속
- 직접일자리 사업이 민간 일자리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접일자리 사업과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과의 연계를 강화
- 중앙정부간, 중앙정부-지자체간, 공공-민간간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지자체에 유사사업 융합운영 등 자율성 확대
-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자체가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사업 기획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분야별 과제목록**

분 야		과 제	소관부처
청년고용 개선 (8)	취·창업 지원 (3)	· 청년 취·창업 역량강화	고용부
		·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생 취·창업 역량강화	교과부
		· 청년 창업 활성화	중기청
	신규채용 및 인턴지원 (2)	·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기재부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고용부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3)	· 글로벌 취업지원	고용부
· 해외인턴사업		교과부	
· 해외봉사단파견 사업(World Friend Korea 사업)		외교부	
열린고용 및 현장중심의 인적자원 양성 (7)	열린고용확산 (3)	· 고졸 취업 문화 정착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	교과부
		· 고졸자 등 능력개발·취업지원	고용부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중기청
	산업현장 중심의 인적자원 양성 (4)	· 국가기간 전략직종 훈련	고용부
		·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고용부
		·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연수 지원	중기청
	· 산업전문인력 역량 강화	지경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지원 (6)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활성화	복지부
		·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인프라 조성	복지부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행안부
		· 사회적 기업 육성	고용부
		·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문화부
		· 산림분야 녹색 일자리 창출	산림청
취약계층지원 (7)		· 취약계층 취업성공 지원	고용부
		· 개인의 능력개발 지원	고용부
		· 여성·장애인 고용 촉진	고용부
		· 장년층 고용연장·촉진 지원	고용부
		·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취업지원	여가부
		· 장애인·노인일자리 지원	복지부
		· 자활사업	복지부
노동시장 제도개선 (4)		· 장시간 근로 개선	고용부
		· 시간제 일자리 창출	고용부
		· 지역일자리 공시제 등 내실화	고용부
		· 고용 안정 지원	고용부

□ 부처별 과제목록

부 처 (과제수)	관리과제	가중치
기획재정부 (1)	·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100
교육과학기술부 (3)	·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생 취·창업 역량강화	40
	· 해외인턴사업	10
	· 고졸 취업 문화 정착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	50
외교통상부 (1)	· 해외봉사단파견 사업 (World Friend Korea 사업)	100
행정안전부 (1)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00
지식경제부 (1)	· 산업전문인력 역량 강화	100
보건복지부 (4)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활성화	20
	·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인프라 조성	20
	· 자활사업	30
	· 장애인·노인일자리 지원	30
고용노동부 (15)	· 청년 취·창업역량강화	7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8
	· 글로벌 취업지원	4
	· 고졸자 등 능력개발·취업지원	7
	· 국가기간 전략직종 훈련	7
	·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5
	· 사회적 기업 육성	6
	· 취약계층 취업성공 지원	10
	· 개인의 능력개발 지원	5
	· 여성·장애인 고용 촉진	9
	· 장년층 고용연장·촉진 지원	6
	· 장시간 근로개선	9
	· 시간제 일자리 창출	4
	· 지역일자리 공시제 등 내실화	6
	· 고용안정 지원	7
여성가족부 (1)	·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취업지원	100
문화체육관광부 (1)	· 문화예술교육활성화	100
산림청 (1)	· 산림분야 녹색 일자리 창출	100
중소기업청 (3)	· 청년 창업 활성화	60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30
	·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연수 지원	10

3. 녹색성장과제

1 평가 개요

□ 평가 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녹색성장과제에 대한 추진노력 및 성과평가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평가 대상

- 대상기관 : 24개 중앙행정기관

구 분	기 관
장관급 (15개)	기재부, 교과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화부, 농식품부, 지경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방통위, 금융위
차관급 (9개)	조달청, 통계청, 방사청, 방재청,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식약청, 기상청

- * 녹색성장과의 업무상 연관성을 감안, 녹색성장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한 24개 중앙행정기관으로 선정

- 대상과제 : 총 40개 과제(* 붙임 참고)

□ 평가방법

-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평가단(23명)」을 구성하고, 정책분야에 따라 5개 분과*로 운영

- * ① 온실가스 감축 (8개 과제) ② 녹색산업·녹색기술 1 (7개 과제) ③ 녹색산업·녹색기술 2 (8개) ④ 녹색생활 (8개) ⑤ 적응·국제협력 (9개)

- 민간평가단에 대한 기관별 평가과제 설명회(5월)를 통해 평가과제를 보완·확정

- 각 기관의 실적자료(10월말 기준)를 토대로 기관별 추진실적 설명회(10월)를 거쳐 민간평가단에서 우수/미흡사례 및 우수/미흡기관 선정

※ 기관별 등급·점수는 소관 평가과제 점수를 합산 후 평균하여 산출

□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계획과정	계획수립의 적절성 (20%)	① 정책목표의 명료성 (5%) ② 정책내용의 타당성 (5%) ③ 성과지표의 적절성 (10%)
집행과정	추진과정의 적절성 등 (30%)	① 추진과정의 효율성 (5%) ② 추진일정 준수 정도 (10%) ③ 추진 과정상 협조노력 (10%) ④ 정책소통·교육·홍보 노력 (5%)
산출과정	성과 달성도 (50%)	① 성과목표 달성도 (30%) ② 정책 효과성 (20%)

2 기관별 평가등급

* 직제순, 굵은 글씨는 포상 대상기관

구 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최우수 (1)	방송통신위원회	
우수 (6)	농림수산식품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보통 (14)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조달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미흡 (3)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3 평가결과

1 총 평

□ (성과)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및 시행령을 제정(11.15 시행),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 그린 ICT 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개발, 녹색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녹색산업·녹색기술 활성화 추진
* 스마트 기기 간 자동교신·제어를 통해 냉난방 조절 등 에너지 절감
- 그린리더 양성, 건물에너지 DB 구축 등을 통해 녹색생활을 유도하고,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지원 등을 통해 적응 강화 추진
- 녹색기후기금(GCF) 송도 유치, GGGI 국제기구 출범, 녹색 ODA 확대 발표 등을 통해 녹색성장 선도국가로 도약
- 녹색성장 정책 추진현황 점검회의(국무총리 주재)를 7차례 개최, 관련정책의 내실화 및 효과성 도모
* Smart Grid·LED(2월), 에너지 효율(4월), 녹색금융·녹색ODA·물산업(5월), 녹색생활(6월), 지자체 녹색성장(8월), 생물다양성(9월) 등

□ (보완필요)

- 목표관리업체의 예상배출량 설정의 적정성 제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노력 제고 필요
* 입지규제 완화, R&D 및 금융지원 강화, RPS제도 보완 등
- 구체적인 녹색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녹색소비·녹색가정 실현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필요
-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대책 보완, GGGI 조속한 국회비준 추진 필요

② 분야별 평가결과

① 온실가스 감축분야

주요 정책성과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률 및 시행령 제정(녹색위, 총리실 등)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대폭 감축 및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할 **배출권거래제 법령 제정·시행(11.15)**

* 녹색위,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 및 산업계·시민단체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보완을 거쳐 법령 마련, 시행

* '15년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산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계획기간('15-'17년)은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하는 등 보완장치 마련

□ 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사업체계 개편 및 지원 강화(지경부)

- **자발적 감축사업***(KVER) 참여대상을 '목표관리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정부구매단가 상향, 비용지원 등 추진****

* '05년 사업실시부터 '12.9월까지 882건, 1,450만 CO₂톤을 인증. 이중 '12.6월까지 436건, 741만 CO₂톤을 톤당 평균 4,920원에 정부구매(총 364억원 지급)

** 구매단가를 상향하고(톤당 5,000원→12,000원), 인벤토리 구축·사업계획서 작성·타당성 평가·실적 검증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12년 140건, 5억원)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도입 등 녹색농업 기반 구축(농식품부)

- 녹색농업기술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효과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 **검·인증 체계 구축, 저탄소 인증지침 개발**

* 산업부문과 달리 농업부문은 탄소감축 방법론이 거의 없는 실정. 목재 펠릿, 지열 히트펌프, 폐열회수 등 방법론 6건 개발 완료

- 화학비료 사용량 저감, 에너지 절감 등으로 CO₂를 20%~60% 감축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 추진

* 8개 품목, 10개 농업브랜드 경영체에서 시범사업 실시, E마트 등 유통업체의 관심 표명에 따라 관촉행사 협의중

개선·보완 필요사항

□ 목표관리업체의 예상배출량 설정의 적정성 보완 필요(지경부, 환경부)

- 금년 관리업체들(458개)의 예상배출량이 실제보다 많이 설정되어 배출허용량(감축목표) 설정시 애로 초래

* '12.10월 조사결과 '12년 예상배출량이 과다한 부분을 파악, 조정(18백만톤 삭감 : 600백톤→582백만톤)

⇒ 현장점검 등 면밀한 검증을 통해 예상배출량을 적정하게 설정하는 등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 필요

□ 관광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유도 강화 필요(문화부)

- 목표관리제 대상인 10개 관광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대상업체들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으나, 非대상 중소기업체에 대한 교육·홍보 및 자발적 감축노력 유도 강화 필요

⇒ 목표관리제 대상업체들 이외에 중소 관광호텔, 테마파크 등의 동참노력 유도* 필요

*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협조,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전기·난방 등 낭비요인을 찾아 에너지 절약시책을 강구하고 관련 직원 교육 등 추진

향후과제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실행기반 구축(녹색위, 환경부 등)

- '15년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기본계획, 국가 할당계획(안)을 수립하고 업체별 할당기준, 각종 지침* 마련

* 부문별·업종별 배출전망 및 할당기준과 방법, 업체별 할당·조정·취소의 기준과 방법, 경매·이월·차입·상쇄·인증의 세부기준과 지침 등 마련

② 녹색산업 · 녹색기술분야

주요 정책성과

□ 그린 ICT 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방통위)

- M2M 기반의 홈에너지 관리서비스*, 통합 교통정보 스마트앱**, 그린 IDC*** 등 그린 ICT를 활용한 녹색사업모델 10종 개발

- 2013년 이후 시범사업 추진 및 보급 확산 추진

*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간 (Machine-to-Machine)의 자동 교신·제어를 통해 냉난방을 자동조절하고 전기사용을 모니터링(가구당 에너지 10% 감축 가능)

** 교통상황, 대중교통 정보, 환승주차장 정보 등 각종 교통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앱 개발(자가용 기준 최대 25%, 연간 48만원 감축 가능)

*** 부하·발열관리, 효율적 공간 재배치 등 그린 IDC(인터넷 데이터센터) 구축 (전력 사용량 최대 50% 감축 가능)

- 저렴한 보급형 스마트워크 솔루션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원격근무, 영상회의 등 스마트워크 확산 적극 추진

- 향후 「스마트워크 촉진법」 및 가이드라인 제정, 컨설팅 추진

* ①스마트폰, 스마트패드, IP TV 등의 기기를 활용, 사무실, 재택, 이동중 등 언제 어디서나 영상회의 등 영상·문서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②기업과 근로자를 연결해주는 모바일 오피스, ③ 스마트마켓 구축 등

□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 적극 추진 (금융위)

- 녹색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인증 보유 기업에 대해 우대**를 강화, 자금지원의 효과성 제고

* 녹색산업 지원실적(조원) : ('09) 6.2 → ('10) 9.0 → ('11) 12.0 → ('12.10) 15.1

** 여신 제공시 금리 인하,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0.5%p 감면, 펀드 투자대상 편입시 가점 부여 등

- LED 팩토링 온렌딩 대상을 확대(LED → 태양광사업 및 에너지 절약 전문사업)하고 한도도 상향조정(350억원 → 700억원)

□ 녹색투자·녹색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기재부)

- 에너지효율 재정사업 조정*, 에너지 고효율 건축 인증기업에 공공사업 참여기회 확대**, 수송부문 에너지효율 제고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녹색성장 확산 지원

* 유사한 사업들을 평가, 조정 : 지자체 LED 보급(지경부, 환경부)은 지경부로 일원화, 그린카드(환경부)와 탄소캐시백(지경부)은 그린카드로 통합 등

** 녹색기업 인증 및 에너지 효율성 인증실적 보유 건축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개정, 9월 현재 51건의 공공사업 수주)

*** 하이브리드차 세제혜택 일몰 연장, 대중교통비 사용분 100만원 추가 공제 확대 등(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9.28)

□ 개도국 중소기업에 사업지원을 통한 녹색성장 전파(중기청)

- ASEIC*(ASEM 중소기업 녹색혁신센터, '11.6 설치) 운영을 통해 개도국 중소기업에 녹색경영 컨설팅, 녹색기술 보급 등 추진**

* ASEIC : ASEM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EcoInnovation Center

** ASEM 국가별 에코이노베이션 지수 개발, 한중 녹색협력포럼 개최 등

개선·보완 필요사항

□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노력 강화 필요(고용부)

- 취약계층의 녹색일자리 고용촉진을 위해 '13년까지 녹색산업분야 사회적 기업* 200개소 인증을 목표로 하였으나, 목표에 미달**

*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학교급식, 재활용, 지역생태 및 문화재 관리 등

** '11년 109개에서 '12년 목표를 51개가 증가한 160개로 수립하였으나, 인증신청 부족 등으로 9월말 현재 13개(25%)가 증가한 122개에 불과

⇒ 구체적인 녹색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녹색 사회적 기업 목표('13년 200개소) 달성 필요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노력 강화 필요(지경부)

- 선진국과 중국 등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크게 낮은 상황*이고 보급실적도 목표를 미달**

* '20년 목표 : 덴마크 35%, 독일 18%, EU 20%, 중국 15%, 한국 6.1%

※ '11년 보급목표가 '03년 2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시 5.0%였으나, '08년 3차 기본계획 수립시 3.2%로 하향조정되었고 '11년 실적은 2.7%(잠정)

** ('10년) 목표 2.98%, 실적 2.61%. ('11년) 목표 3.20%, 실적 2.70%(잠정)

⇒ 입지규제 완화, 주민 수용성 제고, R&D 및 금융지원 강화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적극 추진 필요

- 최근 세계적 경기침체 등으로 태양광 산업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금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의 차질 우려**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등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도록 의무화('12년 2%, '20년 10%)

** 최근 인천만 등 대형 조력발전소 건립계획도 관계부처 및 주민반대로 무산되어 향후 RPS 목표달성에 차질 예상

⇒ RPS 목표 미달로 부과될 과징금 수입(전력산업기반기금 귀속)의 신재생에너지분야 재투자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RPS 가중치의 적정성도 재검토, 조정 필요(조력, 수상 태양광 등)

향후과제

□ 전기요금체계 개편 및 Smart Grid 적극 추진(지경부, 기재부)

- 전압별 요금제,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등 도입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스마트그리드 도입을 위한 요금체계 구축
-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지정, 핵심기술 적극 개발,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스마트그리드 산업생태계 조성

③ 녹색생활분야

주요 정책성과

□ '그린 리더' 양성, '그린 터치' 무상보급으로 녹색생활 유도(환경부)

- 녹색생활을 선도하는 '그린 리더'를 양성*하고 컴퓨터 대기전력 절약 소프트웨어인 '그린터치'를 무상보급**하는 등 그린스타트 운동*** 확산 추진

* 일정시간 교육과정 이수후 그린리더 자격증을 부여. 에너지 절감 컨설팅, 기후 변화교육 강의 등 지역 녹색활동 선도. '12년 21,953명 양성

** 홍보 리플릿 지역 네트워크 배포 및 녹색기업협의회와 MOU 체결 등을 통해 28만대의 PC에 그린터치를 설치, 전력 439만kWh, CO₂ 1,861톤 감축

***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통해 워크숍, 포럼, 연수, 포상, 경연대회, 홈페이지·SNS 운영 등을 통해 녹색생활 확산 추진

□ 건물에너지 통계DB 구축사업 적극 전개(국토부)

- 경기·인천지역 120만동의 건물 유형별 에너지 통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포털서비스를 제공(12월)하여 에너지절약 동참 유도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을 제정(2월), 통계자료 제출근거를 마련하고, 지경부·환경부·지자체·에너지공급기관(한전, 난방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 전국적인 건물에너지 통계DB를 2014년까지 구축할 계획

□ 녹색성장통계 제공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 적극 유도(통계청)

- 녹색성장지표 홈페이지*(<http://green.kostat.go.kr>)를 구축하여 녹색성장의 인지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

* 녹색성장정책지표, 녹색생활지표, OECD 녹색성장지표 등을 제공하고 특히, “나의 녹색생활 실천 점수는?” 코너를 구축하여 녹색구매, 녹색가정, 녹색교통, 녹색직장에서의 자신의 실천점수를 체크하게 하여 학습을 유도

향후과제

□ 녹색소비 지원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방안 마련(환경부)

- 녹색소비가 국민들의 삶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지원* 필요

* 녹색제품 구매시 소득공제, 부가가치세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필요

- 녹색매장으로 지정된 매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녹색매장 대폭 확대를 유도할 필요

* 녹색매장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 등

- 저소득층 등 녹색소비 취약계층의 녹색소비 혜택 불균형을 시정할 지원방안*을 강구

* 저소득층에게 일정한도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직접 보조해주는 '녹색구매 바우처제도' 등 도입 검토

□ 자전거를 통한 대중교통 대체노력 강화(행안부)

- 레저용 자전거 이용 확대성과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자전거를 통해 자가용 이용을 대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도심 출퇴근용 자전거 활성화 노력 강화 필요

- 국내외 성공사례(파리, 창원 등)를 벤치마킹, 도심 자전거 차도 확충*, 자전거 출퇴근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안전대책 등 보완

* 교통체증 가중여부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차도 확충 필요

④ 기후변화 적응분야

주요 정책성과

□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배포(기상청)

- 전지구·한반도·남한 상세 등 3종류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관계부처·지자체의 적응대책 보완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기관별로 각기 다른 시나리오 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
- *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기온이 3.2℃상승 (기존 시나리오는 2.0℃)하고 연 강수량은 15.6% 증가할 전망 (기존 시나리오는 11.5%)

□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강화(환경부)

- 지자체의 적응대책 시행계획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및 대책 제시*, 컨설팅단 구성·운영** 등을 통해 대책수립을 적극 지원
- * 적응대책 시행계획 수립 시범사업을 추진한 16개 기초 지자체 대상
- ** 8개 시·도 및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토론 및 컨설팅 실시

□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 영향분석 및 안전관리 강화(식약청)

-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국가 식품안전 위해요소 DB' 구축, CO₂ 저감 식품제조공정도 개발**
- * 현재 추세대로 온난화가 진행될 경우 2030년에 식품안전수준이 14.4% 하락 전망. 국내 3대 기후권역별 식중독 발생 예측모델도 개발
- ** 현재 식품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화전분 제조기술을 대체하고 소모전력과 CO₂ 배출량을 50% 절감할 수 있는 선택적 산화공정 기술 개발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후변화 요인별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대책 보완 필요(복지부)

- 노인 등에 대한 폭염대책은 수립하였으나, 오존농도·미세먼지 증가로 인한 호흡기질환 증가, 매개 감염병 질환 증가, 폭한 등에 대한 건강관리대책이 더 강화될 필요
- ⇒ 기후변화 요인별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관리대책 마련 필요

향후과제

□ 산업부문 등 경제부문 적응대책 수립(지경부)

- 적응대책이 대부분 건강, 재해예방, 농수산업, 물관리, 산림 등에 치우쳐, 산업계 등 경제부문의 적응대책* 강화 필요

* 환경부, 지경부, 금융위, 기상청이 협력, 기후리스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거나 hedge할 수 있는 방안 (기후파생상품 등) 적극 연구

□ 기후변화 적응 관련 R&D 강화(환경부 등)

-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온 기후 변화 적응(adaptation)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강화할 필요

* 지구온난화 정도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환경, 보건, 농수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계에 대한 영향·대안 분석, 도시 인프라 설계기준 강화 연구 등 필요

□ 방재기준 강화에 따른 소요비용 고려(방재청)

- 기상이변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방재기준* 강화시, 소요비용에 대한 예측 및 고려도 감안하여 적정수준을 설정할 필요

* 소하천 관리기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등

⑤ 국제협력 및 기타분야

주요 정책성과

□ GCF 유치를 통한 녹색성장 선도기반 마련(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 기후변화의 World Bank라 불리는 GCF* 본부를 송도에 유치(10.20), 국격을 제고하고 녹색성장 선도국 도약기반 마련

* GCF(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 선진국에서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불 규모로 기금을 조성,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

□ GGGI 국제기구화를 통한 녹색성장 확산기반 구축(외교부)

- 우리나라가 최초로 주도하여 설립한 GGGI*를 국제기구로 출범(10.18)시켜 녹색성장 모델의 국제적 확산 기반을 구축

*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녹색성장을 글로벌 의제로 확산하고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10.6월 설립

□ AFoCO 설치 등을 통한 산림분야 국제협력 강화(산림청)

- AFoCO*(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산림협력 협정 발효, 사무국 개소(서울) 등을 통해 주도권 선점, 탄소배출권 확보 등 국익 증진

*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아시아 국가들의 조림, 산림녹화, 산림복구 등을 통해 목재자원 확보, 황사 방지, 탄소배출권 확보 등 추진

개선·보완 필요사항

□ GGGI의 국회비준 조속추진 필요(외교부)

- GGGI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하고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고 있으나, 아직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해* 동 기구를 통한 녹색성장 선도에 한계 노정

* 서명한 18개국 중 5개국 비준(덴마크, 가이아나, 키리바시, 필리핀, 카타르)

⇒ 국회비준을 조속히 완료, GGGI의 이니셔티브 유지 필요

향후과제

□ GCF 유치 후속조치의 착실한 추진(기재부, 외교부 등)

- 직접적 후속조치* 뿐만 아니라, 외국인 정주여건 제고방안**,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 함으로써 GCF 유치의 파급효과 극대화 추진

* 임시 사무국(독일 본) 이전, 본부협정 체결, 특별법 제정, 운영비 확보 등

** 주거·교육·의료·관광·문화 등

***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국제금융·R&D·컨벤션산업 등

**** 범정부 추진 기획단을 구성·운영

□ 개도국 녹색성장 추진 지원 확대(외교부, 기재부 등)

- 녹색 ODA 비중목표(‘20년 30%) 달성을 위해 일반 원조의 녹색화, 맞춤형 녹색 ODA 수요 발굴 등을 추진하고, 금년 종료되는 EACP*를 확대한 GGGP** 사업 적극 발굴·추진

* EACP(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 물관리, 신재생에너지, 산림, 폐기물, 저탄소 도시 등 5개 중점분야에 대해 10개 개도국에서 17개 프로젝트를 수행(2009~2012)

** GGGP(Global Green Growth Partnership,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

: 동아시아 개도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개도국을 대상으로 양자·다자, 유상·무상, 민·관 등 다양한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추진

분 야	평가과제 (40개)	주관부처
온실가스 감축 (8개)	① 농림·수산·식품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진	농식품부
	②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산림청
	③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진	지경부
	④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총괄·조정	환경부
	⑤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진	환경부
	⑥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진	국토부
	⑦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진	행안부
	⑧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진	국토부
녹색산업·기술 1 (7개)	① 에너지 가격체계 및 친환경적 세제 개편	기재부
	②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③ 녹색기술 R&D 투자확대 및 녹색인력 양성	교과부
	④ 산업구조의 저탄소·고효율화 추진	지경부
	⑤ 녹색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녹색기술 개발 촉진	지경부
	⑥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지경부
	⑦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	고용부
녹색산업·기술 2 (8개)	① 녹색환경산업 육성·글로벌화	환경부
	② 방송통신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방통융합산업 인프라 구축	방통위
	③ 녹색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활성화	복지부
	④ 식품·의약품부문 신성장산업 육성 지원	식약청
	⑤ 공공조달시장의 녹색제품 구매 확대	조달청
	⑥ 녹색 국방기술 개발 추진 강화	방사청
	⑦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농업기술 개발	농진청
	⑧ 중소기업 녹색성장 지원	중기청
녹색생활 (8개)	① 녹색교육 내실화 및 그린스쿨 활성화	교과부
	② 건물·교통부문의 녹색생활 실천 촉진	국토부
	③ 저탄소·에너지 절감형 국방운영체계 구축	국방부
	④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및 지방 녹색성장 추진 강화	행안부
	⑤ 문화·체육부문 녹색생활 실천 및 녹색관광 활성화	문화부
	⑥ 농식품부문 녹색생활 실천 강화	농식품부
	⑦ 녹색생활 실천 기반구축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환경부
	⑧ 가정생활에서의 녹색성장 실천 확대	여가부
적응 및 국제협력 (9개)	① 대 개도국 녹색공여 확대	기재부
	② 녹색성장 관련 국제회의 기여 및 GGGI 국제기구화 추진	외교부
	③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 관리체계 구축	복지부
	④ 기후변화 대응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청
	⑤ 범국가적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추진	환경부
	⑥ 기후변화에 대응한 사전예방적 방재체계 구축	방재청
	⑦ 기후변화 예측정보 생산 및 활용 확대	기상청
	⑧ 기후변화 적응 농업기술 개발	농진청
	⑨ 녹색성장 관련 각종 통계 개발 및 제공	통계청

4. 정책관리역량

1 평가개요

□ 평가목적

- 각 부처가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책활동의 관리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여 적극적인 리더십 발휘를 통한 정책성과 창출을 촉진

□ 평가대상

- 대상기관 : 40개 중앙행정기관

분야		소관부처	
		장관급(21)	차관급(19)
경제	I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국과위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II	농식품부, 지경부, 국토부, 방통위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특허청
사회문화		교과부, 문화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문화재청, 식약청, 기상청
일반행정		법무부, 행안부, 권익위	법제처, 경찰청, 방재청, 행복청
외교통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원안위	보훈처, 병무청, 방사청, 해경청

□ 평가방법

-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 평가단'(38명)을 구성·운영
- 전문가 평가단이 각 부처에서 제출한 실적자료(10월말 기준)를 토대로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정성평가를 병행
- '부처 업무설명회'를 통해 피평가기관에게 설명기회 제공

□ 평가지표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배점)
1. 정책이슈관리(15)	1-1. 정책이슈 대응 노력(15)
2. 정책조정·통합 관리(40)	2-1. 부처 간 협력도(20)
	2-2. 대 국회 지지 확보 및 대응 노력(10)
	2-3. 이해관계자 지지 확보 및 대응 노력(10)
3. 특정시책 이행 관리(35)	3-1. 나눔과 배려 관련 정책수행 노력(15)
	3-1-1. 장애인 고용(5)
	3-1-2.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5)
	3-1-3. 공공구매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5)
3-2. 공직기강 확립 노력(15)	3-2-1. 자체감사·감찰활동 강화 노력(8)
	3-2-2.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노력(4)
	3-2-3. 반부패 분위기 및 의식제고 노력(3)
3-3. 통계기반 정책관리 노력(5)	
4. 주요정책 집행관리(10,+5)	4-1. 업무계획 이행·관리 노력(10)
	4-2. 재정집행 이행·관리 노력(가점, 0~5)

2 기관별 평가등급

* 직제순, 굵은 글씨는 포상 대상기관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최우수 (2)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우수 (10)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병무청 , 통계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 (22)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흡 (6)	국방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① 총 평

- (여건) 전반적인 내수시장 위축과 경기침체로 국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재난·재해, 성폭력, 학교폭력 등 부처간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정책이슈 증가
- (성과) 정책이슈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는 등 국민눈높이에 맞는 정책관리를 통한 정책효과성 제고 추진
 - (정책이슈) 열린고용 확산, 비정규직 차별시정, 하절기 전력 관리 등 제기되는 정책이슈들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회적 논란 확산 방지
 - (부처협력)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성폭력 및 학교폭력 대응, 주 5일제 전면실시 등 부처간 공동협력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
 - (국회·이해관계자 지지 확보) 배출권거래제법 국회통과, 의약품 약국외 판매 실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적극적 설득을 통해 갈등관리를 제고
 - (공직기강 및 재정집행) 비리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에 대한 기획감찰 및 예년대비 집행률 개선 등을 통해 청렴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
 - (나눔과 배려)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확대 등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와 공정사회 구현 노력
- (보완필요) 일부 현안사안에 대해서는 부처협력 및 공동대응 미흡 등으로 효과성 있는 대책마련 지연
 - (정책이슈) '구미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급박한 사고발생에 대해 부처간 협력 및 공동대응 미흡
 - (정책조정·통합)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 등 개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대책마련이 지연되고 있어 효과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②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① 정책이슈 관리

□ 정책이슈 대응 노력

- 이슈 발생 초동단계에서 범부처적 협조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로 정책의 효과성 제고

- * 농식품부 : ‘소 해면상뇌증(BSE)’ 발생('12.4.25)에 대응하여, 수입 축산물 검역 강화, 수출작업장 현지점검 및 BSE 관련 국내외 동향정보 제공으로 국민 불안 해소
- * 지경부 : 산업계 절전유도, 안정적인 공급능력 확보 및 국민 에너지 절약을 포괄한 「하계전력수급대책」을 수립하여 하계 전력수급 안정화
- * 기재부·농식품부·지경부 : 한·미 FTA 비준에 따른 피해산업 보호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12.1월), 재정지원을 '17년까지 22.1조원에서 24.1조원으로 확대
- * 금융위 :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대부업·사채 등 사금융 의존 경향 증가로 ‘불법사금융’에 따른 폐해가 심화되자 범정부적 협력으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마련, 불법사금융 피해자 원스톱 구제 시스템 마련
- * 해경청 : 중국 불법어선의 흥포화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단속역량을 강화하여 어민·수자원 보호에 기여('12.9월 현재 295척 검거, 전년 대비 85척↑)

- 그러나 일부 돌발적 이슈발생에 대해서는 사후적 처방에 의존하고, 단기적·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정책 효과성 저하 사례 발생

- * 환경부·지경부·고용부·행안부·방재청 :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관련, 역할정립 및 대응 미흡으로 피해 확산과 정부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 노출
- * 국방부 : 전방 접적지역의 경계·보고체계 및 정보공유 문제점 노출됨으로써 DMZ 지역 감시체계 보강, 상하급 부대 간 상황보고 체계 명확화 등 대책 수립 필요
- * 경찰청 : 수원 여성납치 살인사건(4.1) 이후 ‘112 신고센터 종합개선대책’(5.22)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에 대한 부실 대응 사건이 재발, 치안력 제고방안 강구 필요

⇒ 사회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적극 대응함으로써 정책 신뢰성 제고 필요

② 정책조정·통합 관리

□ 부처 간 협력도

- 일자리 창출, 복지기반 확충, 녹색 성장 등 범정부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 대응·협력 강화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

- * 기재부·환경부 : 녹색기후기금(GCF)의 인천 송도 유치('12.10월)로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십의 강화와 사무국 유치에 따른 경제파급효과가 연간 3,800억원으로 예상
- * 교과부·복지부 : 부처간 협력으로 5세 누리과정 시행('12.3월) 및 3~4세 확대를 결정('12.1월)하여, 유치원(교과부)과 어린이집(복지부)의 교육과정을 일원화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을 지원키로 합의
- * 고용부 : 범정부적 열린고용 협력체계(교과부·중기청 등 6개기관) 구축·추진으로 고졸 취업률 상승(특성화고 취업률 ('11)25.9% → ('12) 37.5%, 11.6%↑) 및 사회적 인식 전환 계기 마련
- * 방통위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법무부와 경찰청간 이견을 적극 조율, 위급상황 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다만, 일부 정책의 해결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입장 차이로 인한 협력부족으로 정책성과 발생 지연

- * 국방부·보훈처 : 6.25전쟁 전사자 사망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적극적 협의 부족 및 책임 공방으로 제도 개선 지연
- * 방통위 :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개선 필요성 제기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조정 미흡으로 제도개선 지연
- * 경찰청·국토부 : 전체적인 교통사고 수는 감소하였으나, 교통약자(노인 등)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증가함에도 원인분석 및 감소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련 기관간 공조체계 미흡

⇒ 부처간 이견이 있는 정책추진시 사전에 목표달성도,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예상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대 국회 지지 확보 및 대응 노력

- 입법, 예산 및 쟁점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부처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

- * 복지부 : 당초 의약품 오남용 등을 우려하여 국회에서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확보품목 우선선정(13개) 등 안전관리방안 제시 등을 통해 국회 지지를 확보하여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의 판매 시행('12.11월)
- * 행안부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추진('12.9월)시, 취득세 감면에 반대하던 지자체·야당 등을 설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조기개정
- * 방통위 : 30년간 독점체제였던 지상파방송 광고판매시장에 경쟁도입을 위해 핵심 쟁점의 여·야 이견에 대한 조율을 통한 「미디어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12.2월)
- * 지경부 : 대기업 등 이해관계자 반발로 여·야 의원 간 다소 이견이 있어 폐기될 우려가 있었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설득·소통 강화를 통한 법 개정(5.23)으로 공생발전 기반 마련

- 일부 법안은 18대 국회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쟁점법안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해관계자 설득 부족으로 처리 지연

- * 국토부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에 대해 국회에서 분양가 상승 우려 등의 이유로 입법 지연
- * 금융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투자은행(IB) 도입 등에 대한 국회 내 이견 존재로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금융투자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의 입법 지연
- * 국과위 : 「과기분야 정출연(연)법」 개정(안)의 단일법인화 및 개별기관 법인격 해체에 대한 개별 연구기관의 전통과 정체성 훼손 우려 제기로 처리지연

⇒ 국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당정협의·정책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 등의 전방위적 노력 필요

□ 이해관계자 지지 확보 및 대응 노력

- 해당 정책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정책 대상별 차별화된 설득 노력으로 관련정책의 지지 확보

- * 복지부 : 약가인하 관련 관련업계 의견수렴(장관면담, 국회토론회 등), TV·라디오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등으로 시민단체의 지지 유도 및 정책의 성공적 이행 도모
- * 환경부 : 산업계 등의 반발로 1년간 지연되어 왔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환경부-지경부 간 정책협의회(3.19) 등을 거쳐 법 제정 추진 합의
- * 농식품부 : 한·미 FTA 관련 농어업분야 국내 보완대책 및 세부이행계획 마련 과정에서 농어업인 단체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간담회·현장 설명회를 적극 추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 * 방통위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번호 사용제한 관련,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 그러나, 일부 부처의 경우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 미흡으로 갈등이 확대되거나 정책지연 등의 사례 발생

- * 원안위 : 고리원전 사건, 노원구 도로포장재 방사성폐기물 등으로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정책 추진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및 해결방안 마련 필요
- * 외교부·국방부 :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설명 부족, 오해 소지가 있는 안건 처리과정 등 언론과 정치권의 문제제기에 적기 대처 하지 못함으로써 추진에 차질 발생
- * 국토부 : ‘KTX 경쟁체제 도입’ 관련 제기된 논란(민영화·특혜의혹·요금인상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전략 수립 필요

⇒ 이해관계자와의 다양한 소통 창구 마련을 통해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노력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언론 등에 대한 설득 노력도 병행

③ 공직기강 확립 노력

【성 과】

- 자체 감찰활동을 통해 다수의 비위공무원을 적발·조치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리근절대책 마련·추진**

- * 국토부 : 원스트라이크아웃제·비리자진신고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비리 제로화 방안'을 마련·시행('12.6월)하고, 상시감찰 통해 비위직원 적발·조치
- * 해경청 : '12년 총 14차례의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통해 132명의 비위자 자체 적발 및 조치(중징계 31명, 경징계 84명, 불문경고 17명)

- 불합리한 제도·관행 사례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비리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분야에 대한 기획점검 실시

- * 행안부 : 관서운영경비의 관행적 부당집행에 대한 점검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 청소서비스 위탁용역에 대한 기획 감찰을 통해 위법·부당사례 적출 및 예산 누수 방지방안 마련
- * 산림청 : 공용차량 사용일지 기록 강화, 정부구매카드 사용 활성화 등으로 부실 관리 관행을 개선하고, 정책자금 및 지원·위탁사업 등에 대한 실태를 기획 점검하여 회수 등 조치

- 대부분 기관에서 적정 감사·감찰 인력(정원 대비 0.8%)을 확보*하고, 감사부서 근무자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적극 노력

- * 국방부·권익위·보훈처 등 대부분의 기관이 해당(27개 기관, 67.5%)

【보완필요】

- 일부부처의 경우 공직기강 해이 또는 비위행위 직원에 대한 자발적인 조사·적발 노력이 미흡하고,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이 잔존**

- * 농식품부·복지부·기상청 : 국회·언론에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있고, 외부 기관의 비위공직자 통보사항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적발실적이 전무함

- 일부기관은 관행적·구조적 비리 척결을 위한 자체적인 점검·개선 노력이 부족하고, 자체 감사역량 강화 노력도 미흡

- * 기상청 : 공직기강 확립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사례 제출
- 복지부 : 전년도 사례 또는 전년도 확정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제출
- * 여가부·국과위·원안위 : 감사부서 근무자에 대한 교육 및 포상 등 감사역량 강화 노력 미흡

⇒ 비위자 엄정 처벌, 자체감사 활성화, 업무특성 및 조직문화에 따른 구조적·관행적 비리 척결 등 공직기강 확립 노력 강화 필요

④ 주요정책 집행관리

□ 업무계획 이행 · 관리 노력

- '12년도 업무계획 과제 851개 중 1분기 지연과제는 29개(3.4%, 부처 귀책사유 21개), 2분기 지연과제는 47개(5.5%, 부처 귀책사유 22개)로 증가
- '11년 대비(109개, 9.2%) 지연과제 수와 비율은 감소(△62개, △3.7%)

* 대외환경 및 추진여건 변화에 따른 지연, 법률 국회통과 지연 등은 제외

- 부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지연원인에는 **절차이행 지연***, **관계기관 등 이견****, **정책방향 수정*****이 해당

< 지연원인 >

원인별		절차이행 지연	관계기관 등 이견	정책방향 수정
과제수				
1분기	21	14(66.7%)	5(23.8%)	2(9.5%)
2분기	22	8(36.4%)	9(40.9%)	5(22.7%)

* 국토부 : 관계기관과의 의견수렴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여수박람회 사후 활용방안 마련' 일정 지연

교과부 : 재정전략실장 보임기준, 직제 및 사무분장에 다소 기간이 소요되어 서울대학교 법인 정착 지원을 위한 'CFO 영입 공모' 일정 지연

조달청 : 거래소의 상장심사 일정 및 시스템 개발 지연 등으로 민관공동비축 활성화를 위한 '구리 ETF 상장' 일정 지연

** 농식품부 : 농협에 대한 정부 지원내용의 지연확정(2.24) 및 노조반발로 인한 이행 약정서 체결 지연(5.29)으로 인해 '유통지원자금 운용 및 조성방안'고시 제정 지연

고용부 : 채용공시내용 중 세부고용형태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이견 조율과정에 일정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공공기관 고용구조 공시' 지연

보훈처 : 조성예정지(보은군) 주민의 반발로 인한 유치지 변경(괴산군)과정에서 일정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을 위한 '중부권 호국원 실시설계 착수' 지연

*** 교과부 : 주 5일 수업제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1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추진일정을 연기

⇒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사전예측과 준비를 통해 연초부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연요인 최소화 노력 필요

□ 재정집행 이행 · 관리 노력

- 유로존 불안 등 대내·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각 부처의 집행관리 노력 강화에 따라 예년 대비 집행률 개선('10~'11년 평균 75.3%→'12년 78.9%, 3.6%p 증가)
- 2개년 평균 대비 '12년 재정집행률 증가 부처 26개(10% 이상 증가 부처 5개, 5% 이상 증가 부처 10개), 감소 부처 13개

- * 국토부 : 예산 및 주택기금 사업의 공정관리, 제도개선 노력 등으로 집행률이 제고(4.77%p 상승)되고, 주택기금 사업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노력으로 2개년 대비 집행률이 12.27% 증가
- * 방재청 : 재해예방사업(6,535억원, 본예산의 80% 수준)은 조기추진단 구성·운영, 현장방문·점검 등 지자체 재정집행 강화를 통해 2개년 평균보다 5%이상 집행률 제고

- 그러나, 일부 부처(농식품부, 국방부, 농진청 등) 대규모 사업의 집행 부진으로 전체 집행률 제고 미흡

- * 농식품부 : 혁특회계 세수부족으로 소속기관 이전을 위한 토지매입, 공정절차 추진 등이 지연되어 2개년 평균 대비 집행 저조(△10.42%p)
- * 국방부 : 주특회계는 한·미간 특수정보시설 건설비용 지급방식 이견으로 2개년 평균대비 집행 저조(△9.8%p)
- * 농진청 : 혁특회계 농업생명연구단지조성사업(4,874억원)이 종전부지 매각 지연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2개년 평균대비 집행 저조(△5%p)

⇒ 집행부진 부처·사업에 대한 적기 재정계획 수립 및 집행애로 요인 해소 등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대내·외 재정위기의 상시·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경기보완적 역할 수행 필요

□ 정책현안과제 이행상황 점검·평가 결과

- 총 25개 과제 398개 개선조치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과제별 개선방안의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
- 추진완료된 개선조치는 291개(73.1%), 정상추진 중인 개선조치는 84개(21.1%), 지연·미흡은 23개(5.8%)

○ 대부분의 과제는 개선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효과를 달성하여 국정 운영성과 제고에 기여

* 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미소금융 확대, 사회적기업 활성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 등

○ 다만, 일부 개선조치는 일정이 지연되거나 조치내용이 미흡하여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 한약재 원산지표시제도 도입, 농어촌 119 구급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등

⑤ 특정시책 이행관리

□ 장애인 고용 노력(의무고용률 : 정부·공기업·준정부기관 3%, 기타공공기관 2.5%)

○ 상당수의 부처(40개, 3.26%)·공기업(27개, 3.16%)·준정부기관(83개, 3.45%)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 특히, 법제처는 중증장애인 지속 채용으로 4.37%를 달성하였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던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장애인 적합 직위 발굴 등으로 의무고용 준수기관으로 전환

○ 일부 부처*(10개, 2.15%)와 기타공공기관(125개, 1.96%)은 의무고용률 미달

* 농촌진흥청(2.96%), 기상청(2.94%), 기획재정부(2.89%), 경찰청(2.75%), 국방부(2.71%), 교육과학기술부(2.30%), 행정복합도시건설청(2.07%), 외교통상부(2.02%), 국가과학기술위원회(0.82%), 원자력안전위원회(0%)

⇒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기관장이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중증장애인 특별채용 확대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노력** (구매의무 : 총구매액의 1% 이상)

- **다품목 구매 및 일괄구매 방식, 수의계약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확대를 위해 노력**

- * **여가부** : 연구용역 등 간접집행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유도 등의 구매 촉진노력의 결과로 평가대상기관 중 **가장 높은 구매비율(3.20%)**과 **18개 지정품목 구매기준의 유일한 달성**
- * **산림청** : 구매실적을 통합 성과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사무용품 등 소모품자재의 경우 계약부서에서 일괄구매 하는 등으로 구매실적 증가
- * **방재청** : 사무용품 등 소모성자재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집중 구매제’, 부서별 구매목표 할당, 담당자 지정 등의 제도 시행

- 그러나, 전(全)부처 총 구매액(17조 4,342억원)에 대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은 **0.60%**로 저조

- 총 구매액이 큰 기관의 상대적으로 낮은 실적*으로 구매비율은 다소 저조하나, 기관별 구매비율 평균값은 **0.99%**로 구매목표 비율 1%에 근접

* 총 구매액 1조원 이상 중 4개 기관 구매비율(총 구매액) : 교과부 0.27%(1조3,585억원), 국토부 0.33%(3조1,410억원), 지경부 0.68%(5조7,500억원), 방위사업청 0.31%(1조2,349억원)

- ⇒ 우선구매 제고를 위한 **기관별 우수사례의 공유와 함께 d-Brain 시스템**을 이용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자동집계 방식으로 구매실적의 신뢰성 제고 필요

□ **공공구매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중소기업제품 50% 의무, 기술개발제품 10% 권장)

- 전(全)부처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율('11년 62.2%→'12년 63.4%)과 기술개발제품 권장 구매율 달성 기관 수('11년 4개 기관→'12년 16개 기관)가 '11년 대비 증가
- 특히, 중소기업제품 법정 구매율(50%)은 **36개 부처가 달성하였고, 26개 부처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이 전년대비 증가**

- * **행안부** : 사무용품 공동구매제도 운영, 중기제품 우선구매 목표관리체계 구축, 구매 실적의 성과평가 반영 등을 통해 중기제품 구매율이 **전년대비 10.0% 증가**('11년 53.0%→'12년 63.0%)
- * **환경부** : 물품 구매절차 표준화, 소속기관에 대한 구매실적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의 적극적 노력으로 중기제품 구매율이 **전년대비 10.5% 증가**('11년 44.0%→'12년 54.5%)
- * **관세청** : 소속기관 중기제품 구매실적 통합성과관리 및 기관장(직원) 성과급 차등지급으로 중기제품 구매율이 **전년대비 13.0% 증가**('11년 69.8%→'12년 82.8%)

○ 다만,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권장 구매율(10%)에 미달한 부처가 25개에 이르고**, 일부 부처*의 경우 구매실적이 저조

* 구매율 1% 미만 기관 : 경찰청(0%), 공정위(0.27%), 권익위(0.6%), 해경청(0.67%), 여가부(0.71%)

⇒ 각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구매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 다각적인 노력과 중기제품 인식 제고 등을 통해 구매동기 유발 필요

□ 통계기반 정책관리 노력

○ 통계를 활용한 법령 제·개정, 정책수립·집행, 예산절감 등 **통계 활용도를 제고** 하였고, 새로운 통계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통계작성 인프라 구축, 통계서비스 강화 등 **국가통계 신뢰성 제고**

- * **교과부** : 통계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교육통계 품질관리 개선방안**’을 시행하여 대학의 **교육환경 및 질적 수준 평가 등에 활용**(78개 부실대학 및 300개 우수대학 선정)
- * **국토부** : 부동산 행정정보를 일원화하고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는 등 **통계의 신뢰도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 행정비용의 절감 등에 활용**
- * **경찰청** : 범죄통계 **세분화**(기존 : 7개 분야 → 개선 : 15개 분야) 및 **DNA 통계 신규개발**을 통해 형사정책 수립에 기여(외국인범죄, 고령화범죄 분석 등)

○ 다만 **일부부처는 정책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통계 개발·개선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고**, 집계오류, 조사부실, 미승인 공표 등 통계관리 미흡으로 통계 신뢰성 관련 오해 야기

- * **통일부** : 전문 인력, 예산의 확보, 통계전담체제 등이 미흡하고, 일부 분야에서 협력 및 통일을 대비한 자료의 구축과 정비가 필요
- * **문화재청** :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통합관리시스템 연계가 부족하며, 문화재통합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력된 **정보의 확산에 초점**을 맞출 필요

⇒ 각 부처별로 **통계역량**(전담조직·전문인력 등)을 **강화하고 정책 수립시 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5. 규제개혁

1 평가개요

□ 평가목적

-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기업부담 완화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적극적 규제개혁 노력 유도

□ 평가대상

- 대상기관 : 등록규제가 6개 이상인 28개 중앙행정기관
 - * 부 단위(17개)와 청 단위(11개) 내 등록규제 수를 기준으로 그룹핑, 평가결과의 신뢰성·수용성 제고

구 분	기 관 명	
부단위 기관(17)	I 그룹 : 8개 부처 (등록규제수 300개이상)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II 그룹 : 9개 부처 (등록규제수 300개 미만)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청단위 기관(11)	III 그룹 : 11개 부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 등록규제가 5개 이하인 기관(국무총리실,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사회경제적 여건상 규제개혁이 어려운 기관(통일부, 농촌진흥청, 기상청) 제외

□ 평가방법

-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
 - * ‘규제개혁과제 발굴’ 등은 정량적 평가, ‘규제개혁 효과’ 등 정성적 항목은 민관합동 규제개혁평가단의 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병행 실시
- 규제개혁추진에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단」을 구성·운영(총 14명)

□ 평가지표

구 분		평가지표(배점)
종합 성과평가 (70%)	계획(30, ±5)	1-1. 규제개혁분야의 적절성(20) 1-2. 규제개혁발굴률(10) * 전략과제 발굴·검토·수용 기여도(±5)
	집행(40)	2. 규제개혁 추진역량(15) 3. 추진의 적극성(5) 4. 입법절차 준수의 적절성(5) 5. 홍보의 적극성(15)
	규제개혁 성과 (30, ±5)	6. 규제개혁과제 이행률(10) 7. 규제개혁 만족도(20) * 행정조사 정비실적(±5)
중점과제* 성과평가 (30%)	계획 (30, ±3)	1. 과제선정의 적절성(30) * 목표설정의 적극성(±3)
	규제개혁 성과 (70) * 참고	2-1. 규제개혁 홍보(15) 2-2. 규제개혁 효과(35) 2-3. 규제개혁 만족도(20)

※ 종합성과평가(70%)와 중점과제 성과평가(30%)를 가중평균

2 기관별 평가등급

* 직제순, 굵은 글씨는 포상 대상기관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최우수 (2)	농림수산식품부	특허청
우수 (5)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보통 (16)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미흡 (5)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① 총 평

- (여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속에 내수시장 위축과 불투명한 경기전망으로 기업경영상의 애로 및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해소·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요구 증대
- (성과) 기업활성화 지원, 국민 부담 완화 분야를 중심으로 총 946건의 과제를 개선 완료
 - 수요자·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 노력을 강화하고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과제를 이행함으로써, 사회 각계의 요구분야를 지원
 - * 전문연구기관 의뢰, 여론조사,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12년 추진과제 1,473건 발굴
 - * 완료 과제 중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부담 경감 과제가 전체의 60%를 차지
 - 규제개혁 성과 홍보 강화, 국민·기업애로 제기사항의 수용률 제고 노력 등으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고객 만족도 상승
 -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청취를 강화하고 피규제자별 차별화된 전략적 홍보 노력으로 국민의 이해와 지지 제고
 - * 국민·기업애로 제기사항 수용률(50%)은 우수(40% 이상), 만족도 평가결과는 69.4점으로 전년대비 2.2점 상승
- (보완필요) 일부부처의 경우 규제개혁과제 발굴률 제고,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규제영향분석 강화 필요성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속적 개선 노력 필요
 - 규제건수 대비 발굴 노력이 부족하거나, 서면심사 대체 실시 등으로 충실한 규제 품질 정비 노력이 다소 부족

② 분야별 평가결과

① 각 부처 규제개혁과제 발굴·정비

주요 성과

□ 다양한 발굴노력을 통한 체감도 높은 과제 선정

- 전문연구기관 의뢰, 대국민 공모 및 여론조사 실시, 민원 및 언론 보도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 수요를 파악
 - * 행안부 : 국민 1,550명을 대상으로 SNS, 이메일 등을 통해 설문조사(11.11~12월) 실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중점과제로 도출
 - * 금융위 :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IBK경제연구소에 의뢰, 실태조사(3,420개 업체, 금융기관 여신 및 보증담당자 600명) 실시
 - * 관세청 : 對 국민 '氣-UP 규제개혁 과제 공모전'을 추진하여 199건 발굴, 세관직원이 직접 기업을 찾아가는 '규제발굴탐사단'을 운영, 15건 발굴
 - * 농식품부 : 장관 농어촌 현장 방문(81개 시·군, 총 62회) 실시, 농어촌 지역 145개 시·군 의견수렴('12.2.2~2.10), 국민제안 및 민원 분석 실시
- 비용절감·생산증대 효과 및 사회적 편익 등이 크거나, 수혜자 수가 많아 파급효과가 큰 과제도 상당수 선정
 - * 특허청 : 전자출원시스템 개선으로 1,400만명의 서비스 이용자가 87.5억원 절감, 특허신청 수수료 인하로 약 26만명의 서비스 이용자가 연간 4.5억원 절감
 - * 기재부 :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제도 폐지로 약 63만명이 신고의무 면제

□ 기업 활성화 지원·국민 부담완화 과제의 신속한 이행

- 전체 발굴 과제 총 1,473건 중 '12.9월 현재 완료대상 과제는 총 1,122건이며, 이중 946건 이행 완료(이행률 84%)
- 특히, 경제활력 제고(369건, 39%)와 국민부담 경감(190건, 20%)에 대한 과제가 전체 완료 과제의 60%를 차지
 - * 국토부 :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확대(12월→14월), 특허부분 하도급으로 원도급자가 직접시공비율 미준수시 발주자 서면승낙 생략 등 건설업체 부담완화
 - * 고용부 : 근로조건 자율점검제도 중복항목 개선으로 사업주 부담 경감
 - * 기재부 : 건설근로자 직접 노무비 구분 지급으로 서민 생활안정·보호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

- 영세·중소영업자에 대한 규제 기준 완화, 규제 시기 조정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차등 적용
 - * 환경부 : 중소규모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 소규모 고물상 폐기물처리 신고의무 제외
 - * 관세청 :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납기 연장 허용
- 낙도·산간 등 취약지역의 불편해소 및 인프라 확대를 위한 규제 기준 및 절차 완화
 - * 방통위 : 낙도·오지 등의 초소형지구국 개설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 복지부 :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완화(인구 500인 미만 지역도 보건진료소 설치 가능)

개선·보완 필요사항

□ 규제개혁과제 발굴률 제고 노력 강화 필요

- 일부 부처는 등록 규제건수 대비 발굴 과제 건수가 10%에 미달하는 등 규제개혁 발굴 노력에 소극적
 - * 전체 평균(30.2%), 지경부(7.5%), 교과부(7.9%), 공정위(8.6%) 등
-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과제를 분석·발굴하여 다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선정

□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 도모

- 부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율이 총리실 규개위와 비교시 낮은 수준이고, 일부 부처의 경우 대면심사 비율이 저조
 - * 총리실 규개위 : 49%, 부처 자체 규개위: 27%(전년대비10% → 27%, 17%p↑)
 - * 외교부, 금융위 등 일부 부처의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하거나, 중요규제 23건 중 21건에 대해서 원안동의
 - 일부 부처는 규제 배경과 원인, 규제대안 검토, 규제비용/편익 분석 등 중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형식적으로 실시
 - * '규제영향분석서 내용의 충실성'이 전체 평균 64점으로 낮은 수준
- ⇒ 주요 안건 대면회의의 의무 개최,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안건처리, 전문기관을 활용한 규제영향분석 등 충실한 심사 실시

② 규제개혁에 대한 고객 만족도

주요 성과

□ 규제개혁 고객만족도 상승

- '12년도 규제개혁 만족도는 69.4점으로 전년대비 2.2점 상승

구분	일반인				전문가				내부고객				종합			
	'10	'11	'12	증감	'10	'11	'12	증감	'10	'11	'12	증감	'10	'11	'12	증감
만족도	64.8	65.0	67.6	▲2.6	70.7	72.6	73.1	▲0.5	63.9	64.1	68.7	▲4.6	66.4	67.2	69.4	▲2.2

- 다른 항목에 비해 '의미 있는 과제 포함정도'(71%)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수요자 요구사항 반영 노력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
- 기관별로는 보건복지부, 국세청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보건복지부는 전년대비 크게 상승(미흡→우수)

□ 전략적 홍보 실시로 국민 체감도·인지도 제고

- 과제 발표 단계에서부터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등을 실시하고, 우수사례는 이해관계자, 수혜집단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 * 방통위 : 단말기 유통·개방, MVNO(알뜰폰) 번호이동성 허용 등의 과제는 이행 이전부터 지하철 스크린도어, 옥외 전광판, 홍보대사 등 통해 적극 안내
 - * 특허청 : 특허고객·잠재고객·외국고객으로 나누어 차별화, 지식재산권 등록 제도를 직접 이용하는 특허고객에게는 PCRМ(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정책고객서비스)을 통해 홍보, 잠재고객에게는 SNS·블로그 활용
- 특히, 웹툰 등 홍보 영상물 및 심벌마크 제작, SNS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규제개혁 성과 체감도 향상에 기여
 - * 환경부 :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유발을 위해 웹툰 제작·배포, 어린이 건강지킴이 카나리아(실내공기 측정장치) 개발·보급
 - * 농식품부 : 농림어업 애로해소 만화 제작·배포(농식품분야 불합리한 규제를 바꿔나가는 제로맨)

개선·보안 필요사항

□ 만족도 수준의 지속적 향상 노력 필요

- 전년대비 만족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여전히 약간 만족 수준*으로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

* 보통 (50) - 약간 만족 (66.67) - 만족 (83.33) - 매우 만족 (100)

⇒ 수요자 중심의 과제 발굴을 지속 유도하고, 이행상황 점검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기 완료한 과제의 체감도 제고 노력 강화

□ 적극적 소통 노력 강화 필요

- 일부 부처는 보도자료 배포 외에는 홍보 실적이 없는 등 양방향식 대국민 소통 노력 미흡

* 국방부, 보훈처 등은 보도자료, 언론 기고 외에는 피규제자 및 수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홍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

⇒ 제도개선 사항과 성과를 국민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주요 규제성과를 종합 정리, 정책고객별로 차별화된 홍보 적극 실시

□ 장관급 기관 : 17개

* 국방부는 중점과제 미제출로 종합과제만 평가

부처명	과제명
기재부	①서민·중소기업 부담 완화 지원 ②민간기업 편의제고 및 경제활성화 기반 마련
교과부	①유아교육 운영의 합리화와 교육·보육비 지원대상 확대 ②교원 연수부담 및 민간의 연수원 진입규제 완화 ③연구자 중심의 지원제도 행정업무 간소화 ④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외교부	①여권행정제도 선진화
법무부	①갈등조정절차 개선을 통한 국민편의 제고 ②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한 국적 취득 및 회복절차 개선
행안부	①지역경제 활성화 ②정부 인사운영 합리성 제고
문화부	①저작물 이용 활성화 ②소규모 영세사업자 기업환경 개선 ③게임의 사행화 방지 ④예술인 복지증진
농식품부	①농지관련 규제합리화 ②농축수산물의 생산·가공 및 유통 규제개선 ③식품 제조·표시·인증 위생기준 합리화 ④농업기계, 농약, 품종(종자) 등 관련 규제합리화 ⑤어업 제도개선 ⑥축산위생·방역 규제합리화로 축산 선진화 및 국민건강 증진
지경부	①중소중견기업 친화적 환경조성 ②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③R&D 환경개선 ④에너지 수급환경 개선
복지부	①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 ②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선제적 관리 ③복지소외계층 지원기준 완화 ④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사회적 기반 조성
환경부	①환경영향평가 선진화 ②가축분뇨 관리체계 선진화 ③환경규제 선진화 ④환경규제부담 차등화
고용부	①취약계층 고용창출을 위한 규제차등화 및 제한 완화 ②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위한 제한 완화 ③일·가정 양립을 위한 규제 완화 ④산재예방을 위한 안전검사 및 대상 등 규제완화 ⑤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

부처명	과 제 명
여가부	①여성·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국토부	①주택건설·공급 활성화로 주택시장 정상화 ②전월세시장 안정 및 서민주거지원 강화 ③교통부문 생활민원 행정시스템 일원화 추진 ④공항이용자의 편의제고 및 항공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⑤토지이용 및 규제 합리화 ⑥해운항만산업의 규제완화
방통위	①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의 증대 ②방송통신사업 경영환경 개선
공정위	①중소사업자를 위한 공정거래 합리화
금융위	①중소기업 금융애로 요인의 획기적 개선 ②금융투자업 관련 자산운용의 자율성, 창의성 제고 ③보험산업 선진화 ④서민금융 애로요인 타파

□ 차관급 기관 : 11개

* 국세청, 경찰청은 중점과제 미제출로 종합과제만 평가

부처명	과 제 명
보훈처	보훈대상 인정기준 합리화
관세청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방재청	119 구조구급체계 개선 및 수요자 중심의 화재안전기준 선진화
문화재청	문화유산의 규제정비를 통한 보존·활용 극대화
산림청	산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활성화
중기청	창업환경 및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특허청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보호기반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식약청	①신개발 바이오의약품 신속한 제품화 지원 ②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해경청	수상레저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6. 정책홍보

1 평가개요

□ 평가목적

- 범정부적 핵심과제에 대한 충실한 홍보계획 수립 및 기관간 협력홍보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 평가대상

- 대상기관 : 41개 중앙행정기관

* 업무특성에 따라 정책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분하되, 지표별로 조직특성(정원 및 홍보담당인원)에 따른 분류를 병행하여 평가의 형평성·수용성 제고

구 분	기 관 명
정책기관 (21개 장관급)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집행기관 (20개 차관급)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평가방법

-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민·관 합동 정책홍보 평가단*」 운영
* 35명(공무원 17명, 민간전문가 18명)
- 평가단이 각 부처에서 제출한 실적자료를 토대로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정성평가 실시
- 부처별 정책홍보 추진 성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국민 소통 활성화 및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

□ 평가지표

- 기획협력(10) : 주요 정책과제 홍보계획의 충실성(10)
- 소통활동(48) : 범정부적 협력 홍보 충실성(5), SNS 등 온라인 소통(20), 정부매체 활용 실적(8), 주요정책 온/오프라인 오보대응(10), 외신대상 홍보활동 실적(5)
- 성과확산(42) : 주요정책 기획홍보를 통한 우수사례 도출 실적(20), 정책 브랜딩에 대한 국민평가(5), 정책성과백서 등 정책기록(7), 기관장 홍보활동(10)

2 기관별 평가등급

* 굵은 글씨는 포상 대상기관,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최우수 (2)	고용노동부	경찰청
우수 (12)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청, 관세청, 통계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보통 (23)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흡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 대검찰청

① 총 평

- (여건) 국민의 관심영역 확장, 뉴미디어의 등장 등으로 기존의 획일적인 홍보로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매체별·세대별 눈높이에 맞춘 차별화된 홍보방식 필요
- (성과) '대국민 정책소통 강화'라는 범정부 홍보기조 下에서 핵심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 전개
 - * 고졸시대·학교폭력 대책·녹색성장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홍보 활동이 활성화
 - * 핵안보정상회의·여수세계박람회·런던올림픽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한 범정부적 사전 홍보기획 및 다양한 홍보활동이 돋보임
- (뉴미디어 소통활성화) 뉴미디어 홍보의 경우 스마트 미디어 확산으로 기존의 SNS 홍보수단 외에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및 모바일 웹을 정책홍보에 활용, 환경변화에 대응한 적극적 소통활동 강화
 - 모바일에 적합한 플랫폼과 내용을 함께 개발, 카카오톡 활용, 마이피플 오픈채널 운영 등 스마트 미디어의 특징인 실시간성·현장성을 소통활동에 적극 반영
- (홍보역량 향상) 부처의 주요 정책에 대한 기획홍보 역량이 꾸준히 향상, 기관장 중심의 창의적·능동적 대국민 소통이 정책 인지도 제고에 기여
 - 반기별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정책홍보 기획역량과 전문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
 - * 2040 타겟으로 한 군가 "멋진 사나이"(국방부), FTA에 대비한 「우리 임산물 소비 촉진」(산림청), 금융위원장과 함께하는 1박2일 서민금융현장 속으로(금융위), 「청년창업 스토리」 스물셋 청춘, 새로운 날개가 돋다(중기청) 등
- (보완필요) 주요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간 홍보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 정형화된 홍보기법을 지양하고 대내외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하는 등 정책별 특화된 콘텐츠 개발 노력 필요
 - * 방사선 안전 심포지움 관련(원안위), 검찰업무소개 교육자료 개발을 통한 검찰 홍보 관련(대검찰청) 등

② 분야별 평가결과

I. 기획·협력

① 주요 정책과제 홍보계획의 충실성

주요 성과

- 문화부·고용부·농진청 등은 주요정책 홍보계획 수립시 상황 분석과 선제적 홍보계획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구성, 홍보효과 극대화에 기여
 - * “핵안보 정상회의”, “런던 올림픽”,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경우 정확한 홍보여건 분석 및 다큐 제작, 응원가 확산, 업종별 협의체와 MOU 체결, 주요포털(네이버, 다음)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방안 제시(문화부, 고용부 등)
 - *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의 경우 홍보여건 분석 및 홍보전략에 따른 프로그램이 일관성 있게 제시(농진청)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 홍보목표와 전략 간에 구체화된 연계성이 약하고, 홍보 기획 과정에서 부처협력 부분이나 명확한 역할 분담 부족
 - * “차기 전투기(F-X) 사업” 등 주요 대형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시 체계적인 사전 홍보전략 수립 및 SNS를 활용한 홍보활동이 다소 미흡(방사청)
 - * “물놀이 안전대책 홍보”의 경우 상황별 홍보타겟과 프로그램의 구체성이 약하고, 매년 비슷한 홍보전략으로 정형화 되어있음(해경청)

II. 소통 활동

① 범정부적 협력 홍보 충실성

주요 성과

- 지경부·여성부·방재청 등은 주요 정책발표 및 홍보일정 공유를 위한 ‘월간홍보계획’ 수립시, **주요 발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범부처 홍보계획 연계에 적극 협조
 - * “동계전력수급 대책회의”, “국민발전소 건설 주간” 등(지경부),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성과 및 계획” 등(여성부), “황사피해 방지대책” 등(방재청)은 월간홍보계획을 매월누락 없이 전회 제출하여 부처 간 정책 공유도를 높임
- 고용부·국토부·산림청 등은 **월별로 발생 가능한 예상·반복·주요 계기 이슈에 대해 선제적 소통활동을 기획**
 - * “한국 잡월드(JOB WORLD) 개관 등(고용부)”, “자전거 대축전” 등(행안부), “4대강 이용 활성화”, “여수세계박람회” 등(국토부), “산사태 발생 및 대응” 등(산림청)은 관련 부처간 협조 하에 시의성 있는 홍보활동 이행
 - * 4대강 수변 “한강문화 개관식”, “자전거 관광상품”, “녹색자전거 열차”, “달성보 문화장터 개장식 등 지역문화축제 활성화로 국민 공감도 및 이해도 제고에 기여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 정책발표 시 유관부처와의 협력홍보 강화 필요**
 - * “아시아법제포럼 개최” 홍보를 상반기 동안 계획하였으나, 단순기고 및 전광판 광고에 그쳐 대국민 인지도 미흡(법제처)

② SNS 등 온라인 소통

주요 성과

- 교과부·농식품부·중기청 등 정부부처의 SNS 등 온라인 소통에 대한 인식과 이해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홍보로 어려운 이슈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도 제고에 기여
 - 다양한 오프라인 매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 * 소셜기부(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정책의 공익성과 시민참여를 견인, SNS 등 뉴미디어를 다양한 오프라인 매체와 연계하여 적극적 정책홍보(교과부, 농림부 등)
 - * 고객참여 뮤직비디오 “시장 스타일” 제작·배포, 정책정보 동영상 제작 등 공감형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새롭고 다양한 홍보기법으로 활용(중기청)
 - 일시적·1회성 이벤트 중심의 정책홍보에서 상시적·지속적 소통 활동으로 전환,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
 - 고용부·환경부·중기청 등 일부기관은 스마트 미디어 사용자 증가로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마이피플) 등 스마트 앱을 활용한 새로운 정책홍보 방식을 도입
 - * 모바일에 적합한 플랫폼과 내용을 함께 개발(UCC·웹툰), 카카오톡 활용 및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월급쟁이 수다, 노동법 365 등) 홍보 전개(고용부, 환경부 등)
 - * “마이피플 오픈채널 운영”으로 정부 부처 처음으로 스마트폰 메신저로 정책고객에게 최신 정보제공(중기청)

개선·보완 필요사항

- 부처별로 온라인 소통 활용실적 및 수준차이가 크고, 쌍방향적 의사소통보다는 일방적 정보전달에 치중
 -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외에 다양하고 참신한 SNS 매체나 소셜융합 서비스 활용 필요
 - * 기관장의 동정 알림, 기관장 에세이 연재 등에만 의존하여 다양한 홍보방식 활용전략 다소 미흡(식약청 등)

③ 온·오프라인 오보대응

주요 성과

- 외교부·문화부 등은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되기 전에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선제적·체계적 오보대응 활성화 및 정책 신뢰성 제고에 기여
- 민감한 이슈를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언론보도 이후 타매체로 이슈 확산 방지
 - * “독도”관련 오보 확산 방지 및 사실 전달을 위해 기자들에게 즉각 문자공지 및 백그라운드 미팅(외교부)
 -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공사현장 화재” 관련 왜곡보도 확산방지를 위해 원인조사 및 중앙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 등 처리 사항을 언론에 적극 공개(문화부)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잘못된 사실관계 및 오보·왜곡보도 등 대응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 소극적 대응으로 정정보도, 긍정적 후속보도, 타 매체 확산 방지 등의 성과가 부족
 - * “기초연구 합니까? 年 1조 주고나면 끝?”(교과부)/ “수해복구 왜 늦나 했더니... 작년 예산을 올 4월에야 집행”(방재청)/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늦어져”(법제처) 등 비판적 보도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효과적 대응이 부족

Ⅲ. 성과 확산

① 주요정책 기획홍보를 통한 우수사례 도출

주요 성과

- 고용부·권익위·경찰청 등은 치밀한 환경분석 및 충실한 기획, 홍보환경에 맞는 다양한 홍보수단 선택, 창의적 홍보기법 개발 등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홍보기법을 적극 활용
- 정책 입안 초기부터 정책과 홍보의 결합을 통해 정책효과 제고
 - *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취업성공패키지 & 내일희망 찾기 사업」 그물망 홍보”의 경우 핵심 메시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기조와 스토리 텔링 등 프로그램 실행이 우수(고용부)
 - * “5대 폭력 척결활동 홍보”를 통해 폭력에 대한 인식전환 및 언론보도 관점 전환 등 국민적 관심 유도에 기여(경찰청)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일반적이고 정형화된 홍보에 치중하는 등 참신하고 전략적인 홍보기획 부족
-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홍보기법 및 콘텐츠 개발 등 대내외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 필요
 - * “알뜰폰(MVNO 서비스)”, “방사선 안전 심포지엄”의 경우 공모전, 홍보대사 위촉, 온라인 홈페이지 게재 등 정형화된 홍보기법으로 참신성 부족(방통위, 원안위)
 - * “검찰업무소개 교육자료 개발을 통한 검찰 홍보”의 경우 실제 홍보활동을 통해 얻어낸 성과가 아닌 ‘계획’을 기술하는 수준에 그침(대검찰청)

② 정책브랜딩 홍보

주요 성과

- 각 부처의 대표 정책(60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선호도는 보통이상 수준(2.74점, 5점 만점)
 - 정책별로는 감기약 등 편의점판매(복지부), 디지털 방송전환(방통위), 보금자리주택(국토부) 순으로 국민 인지도·선호도에서 우수
- ⇒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공감형 정책이나, 국민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의 정책이 상대적으로 인지도·선호도가 높은 경향

개선·보완 필요사항

- 보비스(찾아가는 보훈복지서비스), 0404 등 일부 정책 브랜드의 경우 국민 선호도·인지도가 낮아 개선 필요
- ⇒ 정책의 브랜드만 봐도 정책의 비전과 가치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독창적인 네이밍 구현 필요

③ 기관장 홍보활동

주요 성과

□ 41개 부처 기관장이 총 6,014건의 방송출연, 인터뷰, 정책설명회, 강연회 등 활발한 홍보활동 전개

<활동유형별 기관장 홍보실적>

구분	방송출연	인터뷰	기고	정책설명회	강연회	간담회	계
'12년	474	844	409	1,698	1,383	1,206	6,014
'11년	239	467	207	981	400	543	2,837

* 기관장 홍보 실적이 전년 대비 47.1% 증가

○ 지경부·통계청·관세청 등은 기관장의 다양한 매체 활용 소통활동과 함께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해 국민과의 직접소통 노력도 활발히 전개

* 기관장의 캐리커처 개발 및 자필편지 형식 등 친근한 소통활동(지경부)

* SNS 및 블로그에 통계에 관한 글을 시리즈로 연재(통계청)

* FTA를 활용한 수출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관장과의 연계릴레이 홍보가 참신(관세청)

○ 교과부·국토부·행안부·금융위 등은 기관장의 현장소통 계획을 전략적으로 기획,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책 공감대 확산에 기여

* “학교폭력 현장소통 프로젝트 ‘필통-톡(talk)’”(교과부), “국민 행복을 위한 서민주거해결사”(국토부), “찾아가고 싶은 자전거길”(행안부), “금융위원장과 함께하는 1박2일 서민금융현장 속으로”(금융위)

개선·보안 필요사항

- 일부 기관장의 경우 1회성 이벤트 및 제한된 정책고객을 타깃으로 하는 현장소통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확산 미흡
 - 정책홍보 관련 인터뷰·기고·현장소통 등 일반적인 홍보활동을 다양한 매체와 연계하는 홍보기획 부족

③ 향후과제

-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으로 대국민 정책소통 강화 필요
 - 부처별 정책과 고객 특성을 고려한 홍보계획을 수립, 정부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와 공감도 제고
 - 특히,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홍보기획 단계부터 내실있게 활용함으로써 다양하고 참신한 홍보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정책단계별·수요자별 특화된 홍보매체 및 메시지를 설정하고 홍보콘텐츠도 차별화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 도모
 - 부처별 역할분담 및 협력홍보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홍보를 추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국민 공감 확산
- 정책홍보 환경 변화에 따른 홍보기법 다양화 노력
 - 트렌드에 따른 천편일률적인 뉴미디어 활용 보다는 각 부처 또는 정책 특성에 따른 전략적 뉴미디어 활용 방안 모색 필요
 -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활용에 있어 각 매체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매체별 특성에 따른 차별적 활용
 - 모바일 앱의 경우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유관부처 공동개발 등 전략적 협조 방안 모색
 - 기관별 홍보 노하우나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논의의 장 활성화 및 시스템 강화

7. 국민(정책 · 민원) 만족도

1 평가개요

□ 평가목적

- (정책만족도) 국민이 직접 평가한 주요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고객 위주의 정책 추진 도모
- (민원만족도)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유도

□ 평가대상기관(41개)

구 분	기 관 명 <직제순>
부 단위 기관 (2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청 단위 기관 (20)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 평가방법

- 설문조사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한국행정연구원 (민간 전문조사기관)에 위탁 실시
 - 각 설문항목에 대하여 응답자의 만족도를 11점 리커트 척도에 따라 응답케 하고, 그 결과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

①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불만족 만족 →
--

□ 조사표본 및 평가대상기간

○ 정책만족도 : 핵심과제 98개(부단위 3, 청단위 2)

조사대상	모집단	표본	대상기간
일반국민	전국의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제주도 및 도서지방 제외)	총 3,900명 (13개 책형 × 300명)	'12.1.1 ~ 9.30
전문가	기관별 ①자체평가위원, ②정책고객(PCRM DB)중 교수·연구원, ③자문위원, ④관련분야 전공 교수와 학회·연구단체 종사자	총 1,800명 (40개 기관 × 45명)	

○ 민원만족도

구분	모집단	표본	대상기간
일반민원	중앙행정기관 본청 및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민원접수대장에 기록된 민원인(방문·서신·전화)	일반민원 및 인터넷민원 모집단 구성 비율에 비례하여 각 기관별로 표본(250명 기본, 최대 450명)을 추출하여 총 25,136명 대상으로 조사	'11.10.1 ~ '12.8.31
인터넷민원	국민신문고, 중앙행정기관 본청 및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		

□ 평가항목

○ 정책만족도

평가항목	평가지표(세부 설문내용)
항목만족도	• 수립·집행과정의 민주성, 정책내용의 적정성, 추진과정의 대응성, 정책 효과성
체감만족도	• 해당정책 전반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총체적 만족도

○ 민원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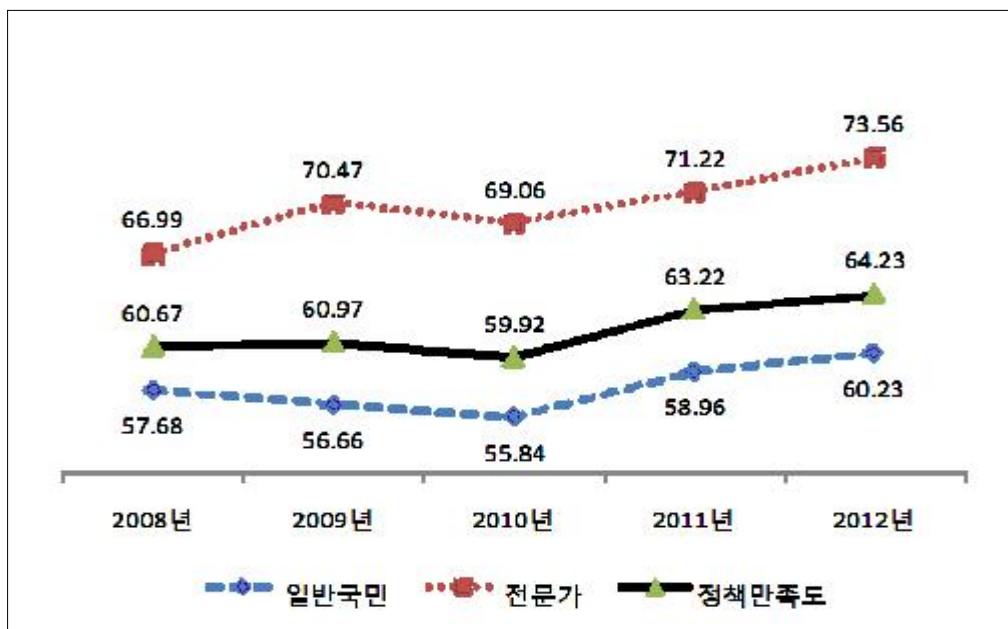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세부 설문내용)
항목만족도	• 민원신청의 접근성, 민원처리의 신속성, 처리과정의 대응성, 민원처리 결과의 공정성
체감만족도	• 해당정책 전반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총체적 만족도

2 정책만족도 평가 결과

총 평

- 2012년도 41개 중앙행정기관(98개 핵심과제) 정책만족도 평균은 64.23점으로, 전년(63.22점) 대비 1.01점 상승
 - 부 단위 기관 평균은 63.25점(전년 대비 1.44점 상승), 청 단위 기관 평균은 65.26점(전년 대비 0.7점 상승)
 - * 청 단위 기관의 정책만족도 수준이 부 단위 기관에 비해 2.01점 높음
- 전년 대비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만족도가 모두 상승하였으며, '10년 이후 정책만족도 평균이 지속 상승세*
 - * ('08) 60.67 → ('09) 60.97 → ('10) 59.92 → ('11) 63.22 → ('12) 64.23점
- 일반국민 만족도는 60.23점(전년 대비 1.27점 상승), 전문가 만족도는 73.56점(전년 대비 2.34점 상승)

< 최근 5년간 정책만족도 추이 >



기관별 평가 결과

부 단위 기관

□ 부 단위 21개 기관(60개 핵심과제) 정책만족도 평균은 63.25점

-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이 높은 정책만족도를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품격 높은 방송 구현 및 미디어 경쟁력 제고’,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네트워크 고도화’ 과제에서 높게 평가
 -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권익보호 구제 확대로 억울함이 없는 사회구현’, 여성가족부는 ‘건강한 청소년 성장을 위한 지원강화’ 과제에서 높은 만족도

< 정책만족도 부 단위 기관 평가결과 >

평가결과	기 관 명 <직제순>
우수 (6)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보통 (15)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금융위원회

청 단위 기관

□ 청 단위 20개 기관(38개 핵심과제) 정책만족도 평균은 65.26점

○ 산림청, 기상청, 병무청 등이 높은 정책만족도를 보임

- 산림청은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재해의 적기 대응', '산림휴양 서비스 증진 및 목재산업 육성' 과제에서 높게 평가
- 기상청은 '위험기상 사전 대응 및 기상서비스 강화', 병무청은 '보충역 복무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의 과제에서 높은 만족도

< 정책만족도 청 단위 기관 평가결과 >

평가결과	기 관 명 <직제순>
우수 (6)	법제처, 병무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보통 (14)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민원만족도 평가 결과

총 평

□ 2012년도 40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만족도 평균은 75.74점으로, 전년(73.72점) 대비 2.02점 상승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집단(65) 및 표본(27)이 과소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 부 단위 기관 평균은 72.21점(전년 대비 3.37점 상승), 청 단위 기관 평균은 78.95점(전년 대비 1.27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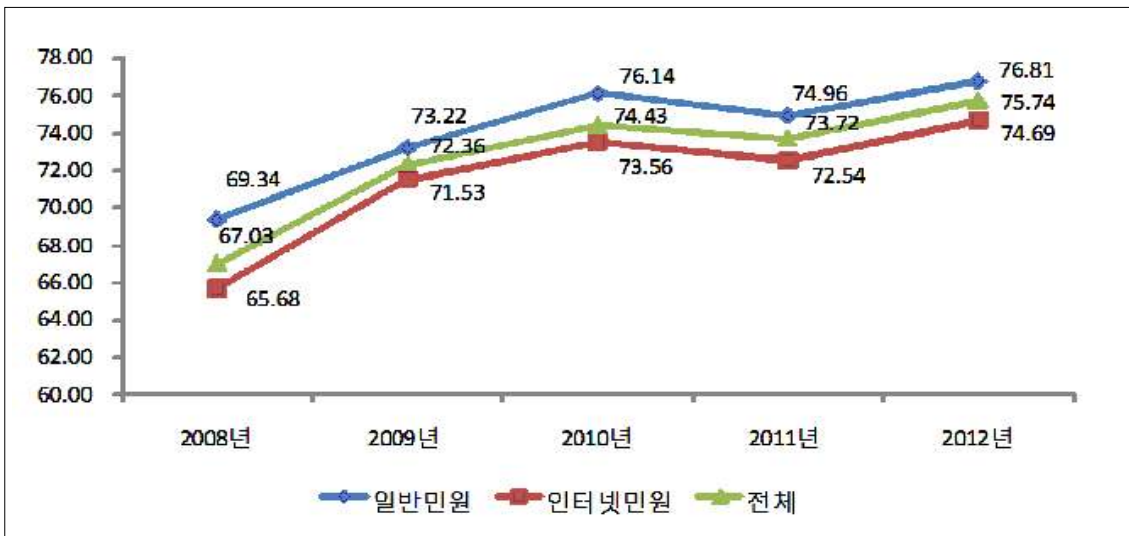
* 청 단위 기관의 만족도 수준이 부 단위 기관에 비해 6.74점 높음

□ 전년 대비 일반민원과 인터넷민원 만족도가 모두 상승하였으며, '11년의 소폭 하락 이후 상승세로 반전*

* ('08) 67.03 → ('09) 72.36 → ('10) 74.43 → ('11) 73.72 → ('12) 75.74점

○ 일반민원 만족도는 76.81점(전년 대비 1.85점 상승), 인터넷민원 만족도는 74.69점(전년 대비 2.15점 상승)

< 최근 5년간 민원만족도 추이 >



기관별 평가 결과

부 단위 기관

□ 부 단위 20개 기관의 민원만족도 평균은 72.21점

○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등이 높은 만족도를 보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민원과 인터넷민원의 '대응성', '접근성' 등의 항목에서 높게 평가

* 고충민원 사전검토제 및 표준서비스제 도입('12.2), 만족도 결과의 민원담당자 성과평가와의 연계 등 민원행정 개선노력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법무부는 일반민원의 '공정성', '신속성' 등에서 높게 평가

* 전화응대 표준매뉴얼 배포('12.4), 민원 우수답변자 포상(분기별 4명) 등 민원행정 개선노력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민원만족도 부 단위 기관 평가결과 >

평가결과	기 관 명 <직제순>
우수 (6)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보통 (14)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청 단위 기관

□ 청 단위 20개 기관의 민원만족도 평균은 **78.95점**

○ 해양경찰청, 병무청 등이 높은 만족도를 보임

- 해양경찰청은 ‘대응성’, ‘공정성’ 등의 항목에서 높게 평가

*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12.10), 화상 수화 통역서비스 및 장애인·고령자 구술 민원 신청제(‘12.8) 등 민원인과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한 지속적 민원행정 개선 노력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병무청은 ‘대응성’, ‘신속성’ 등의 항목에서 높게 평가

*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1.2) 및 불만고객 집중관리시스템 운영 등 민원행정 개선노력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민원만족도 청 단위 기관 평가결과 >

평가결과	기 관 명 <직제순>
우수 (6)	관세청, 병무청,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보통 (14)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Ⅲ. 향후 추진계획

□ 평가결과 환류 및 정책 개선

- 평가결과 종합 및 각 과제별·기관별 평가보고서를 부처에 환류하여 2013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개선에 활용

* 「2013년 업무계획 작성지침」에 2012년 평가결과를 2013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조치

- 평가결과 우수사례는 각 부처에 전파하여 상호 학습 및 벤치마킹을 통해 정책의 품질 제고
- 미흡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별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추진
 - 미흡사례는 내년도 정부업무평가지 우선 점검하고, 심층분석이 필요한 과제는 총리실에서 정책현안과제로 선정, 개선방안 마련

□ 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

- 평가결과 부문별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 지급
- 평가 우수기관 유공자에 대한 포상 병행

□ 평가방법 발전방안 마련

- 평가과정·결과에 대한 피평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평가계획 수립·운영시 반영
- 평가대상 수준 및 범위, 평정결과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 정부업무평가위원·정책분석평가실 워크숍시(12.13~14) 개선방안 토론

